5·18 민주화운동

광주광역시5·18기념문화센터사료편찬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52 전화 062)613-7910 / 팩스 062)613-7949

5·18 민주화운동

광주광역시5·18기념문화센터 사료편찬위원회

Memory of the World

행복한 광주 창조도시

5·18 민주화운동

광주광역시5·18기념문화센터
사료편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광주광역시5·18기념문화센터
사 료 편 찬 위 원 회

발　행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발행처 : 5·18기념문화센터
전　화 : (062) 376-5197, 5198
팩　스 : (062) 613-7949
발행일 : 2012년 5월
인쇄처 : 대상프로세스 (062) 224-1240

5·18기념문화센터 사료편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광주광역시5·18기념문화센터사료편찬위원회

김 동 원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위원장)
나 간 채	전남대5·18연구소장
노 광 범	5·18기념문화센터 소장
안 종 철	국가인권위원회 국장
정 근 식	서울대학교 교수
조 영 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조 진 태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최 영 준	MBC 보도국장

(위원 가나다순)

5·18민주화운동

Contents

❖ **사진으로 보는 5·18민주화운동** | 11

Ⅰ. 5·18민주화운동의 성격 | 45

Ⅱ. 유신체제의 최후, 그리고 12·12반란 | 49

1. 유신체제의 붕괴 : 10·26사건 | 49

가. 10·26사건의 정치적 배경

나. YH여공 농성사건과 김영삼 총재의 제명

다. 유신체제 붕괴의 전주곡 : 부·마민중항쟁

라. 유신독재의 최후 : 1979년 10월 26일.

2. 별들의 전쟁 : 12·12 쿠데타 | 53

가. 10·26사건 이후 전두환의 위치

나. 쿠데타의 시발 : 정승화와 전두환의 갈등

다. 12·12하극상 반란 : 암호명 '생일집 잔치'

라. 육군본부의 반격과 반란군의 불법 무력동원

5·18민주화운동

Ⅲ. 민주화의 후퇴 | 61

1. 신군부의 등장과 정권탈취 음모 | 61

가. 신군부의 최규하내각 장악

나. K-공작계획 :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다. 충정훈련

2. 1980년 서울의 봄 | 65

가. 1980년 봄의 학생운동

나. 동상이몽 속의 정치권

다. 서울역 회군

3. 1980년 봄 광주의 상황과 '5·17' 비상계엄령 확대 | 70

가. 민족민주화 성회

나. '5·17' 비상계엄령 확대조치

다. 5월17일 충정부대의 이동상황

Ⅳ. 5·18민주화운동 | 77

1. 5·18민주화운동의 발발 | 77

가. 비극의 시작

나. 7공수여단과의 첫 충돌

다. 광주를 무차별 진압하라. :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5·18민주화운동

2. 5월 19일의 상황 | 83

가. 11공수여단의 광주 추가증파

나. 공포의 금남로

3. 5월 20일의 상황 | 88

가. 31사단의 반발과 3여단 증파

나. 항쟁의 징후와 첫 발포

4. 5월 21일의 상황 | 93

가. 가자, 도청으로!

나. 도청앞의 집단발포

다. 시민군 탄생과 공수부대 철수

5. 5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상황 | 100

가. 시민공동체 : 광주의 대동 세상

나. 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다. 5월 23일의 상황

라. 수습대책위원회의 내부 갈등 :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마. 광주시민의 자발적 질서회복 : 공동체 실현

6. 신군분의 광주무력진압 : '상무충정작전' | 106

가. 죽음의 행진

나. 상무충정작전

5·18민주화운동

7. 5월 27일 도청 : 새벽의 마지막 불꽃 | 108
가. 도청 진압작전
나. 시민군의 마지막 항전

8. 항쟁의 확산 | 111

9. 5·18민주화운동과 미국 | 113
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입장
나. 한·미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이양

Ⅴ. 5·18민주화운동의 부활과 의의 | 116

1. 5·18민주화운동의 부활 | 116
2.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 117

부 록

1. 광주진압군 지휘체계도 | 125
2. 12·12쿠데타 체계도 | 126
3. 시간대별로 보는 10일간의 5·18민주화운동 | 127
4. 계속되는 5·18의 약사 | 133

※ 참고문헌 | 161

5·18기념문화센터 사료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5·18민주화운동

민족민주화성회 집회를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질서정연하게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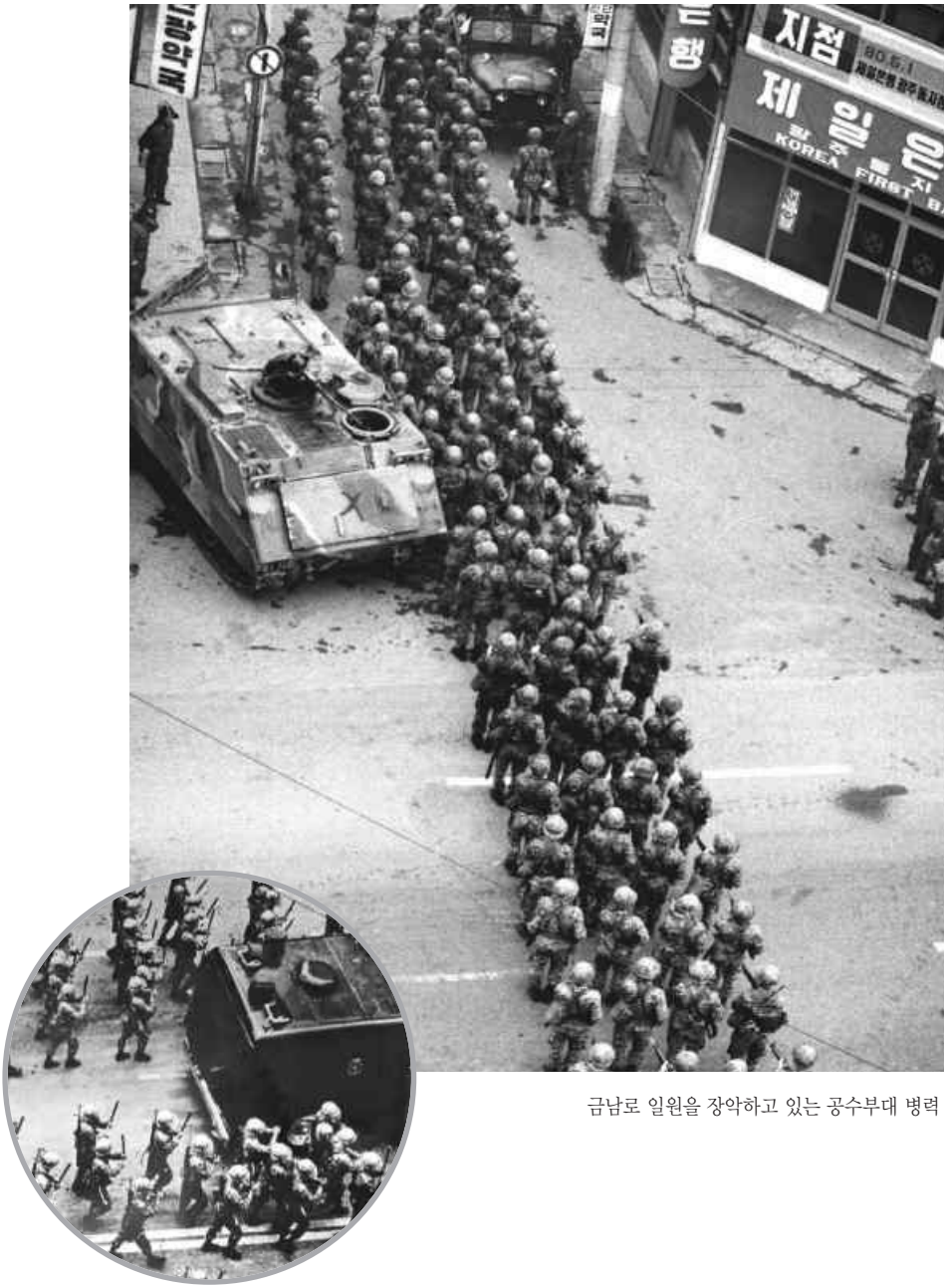
각 대학에서 출발하여 질서정연하게 가두행진하는 학생시위 대열

민족민주화성회를 위해 시가행진하기 앞서 경찰과 대치 모습

군부통치 결사반대!! 비상계엄 해제하라!!

1980년 5월 16일 도청앞 분수대 민족민주화성회 모습

평화롭게 횃불시위를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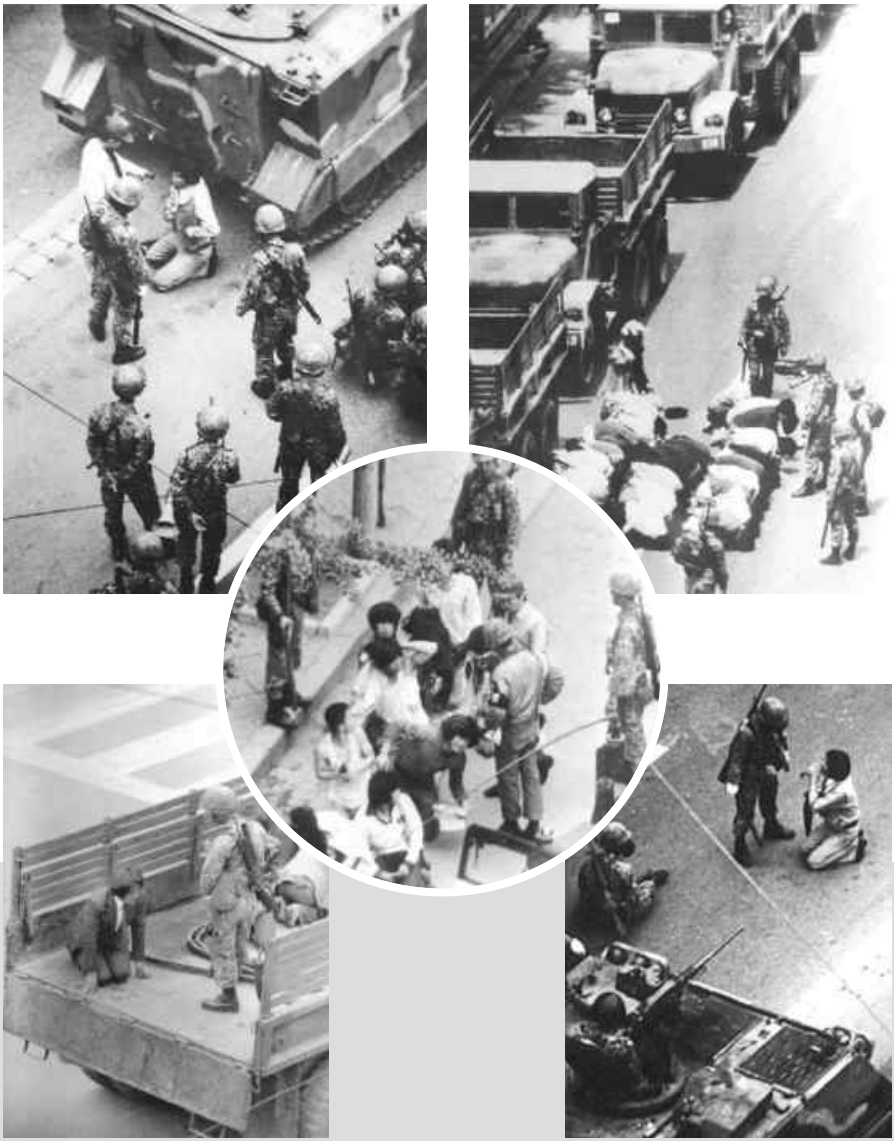


금남로 일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수부대 병력

먼저 한 명의 공수부대원이 진압봉으로
구타하여 쓰러뜨린 후
너댓명의 공수부대원이
집단구타를 자행하고 있다.

공수부대원이 청년 한 명을 붙잡아
경찰들 사이로 끌고 가 장갑차 뒤에서
구타하는 장면

카톨릭센타 뒤에 있는 미도장 여관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계엄군에게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 끌려가는 신혼부부, 아내가 남편의
상처를 만지며 안타깝게 따라가고 있다.



시위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젊은 사람이면 무조건 붙잡아 구타하고
무릎 꿇린 채 트럭에 싣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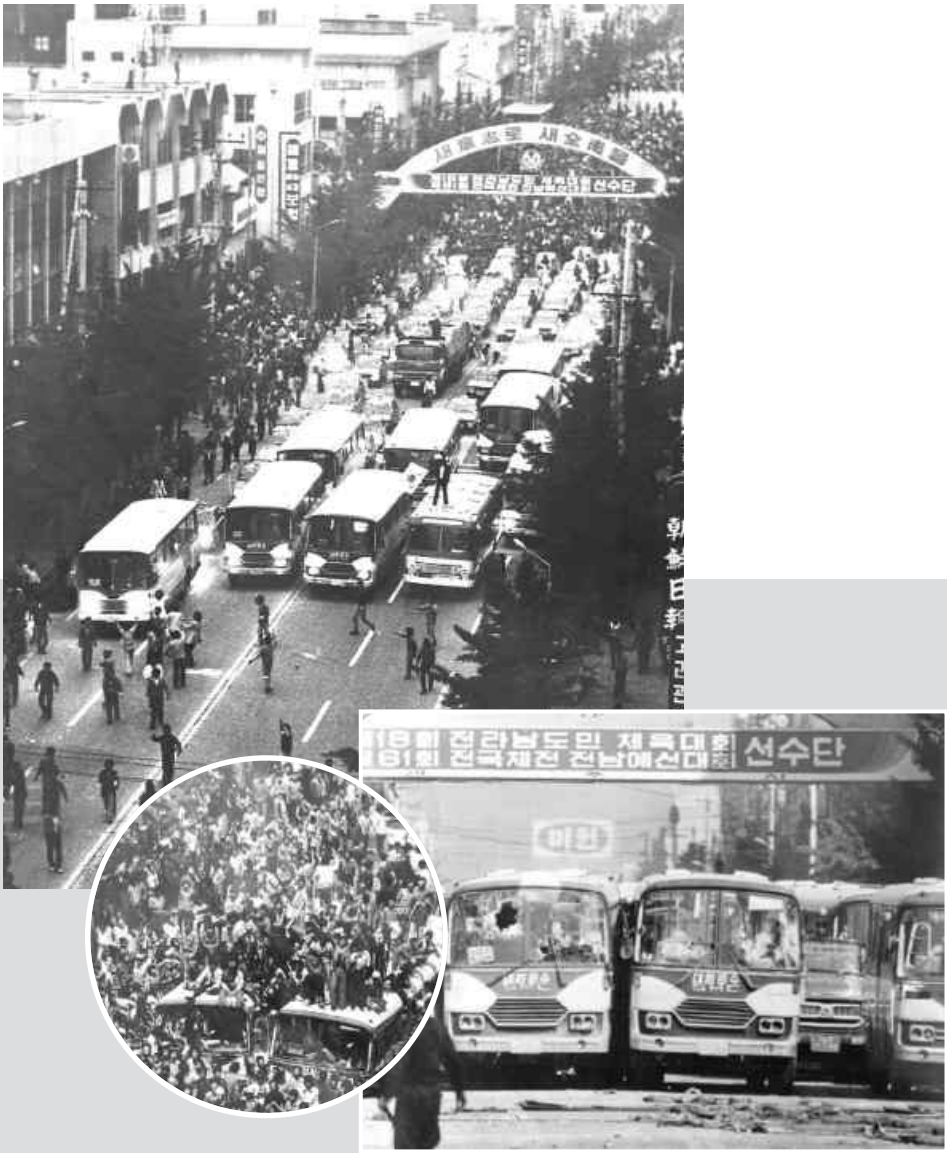
시내에서 붙잡힌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구타를 당한 후
팬티만 입은 채 기합을 받다 대기 중인 트럭에 실려 연행되었다.
트럭에 태워진 시민들은 계엄군의 육중한 진압봉과 총검, 발길질 앞에 어떤 이유도 말할 수 없었다.

고등학생들도 거리로 나서고

시내 병원마다 가득찬 부상자들

들것에 부상자를 실어 옮기는
외국인과 의료진들

계엄군과 시민들 간의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계속된 금남로의 전경



5월 20일 오후 금남로에 모여든 차량시위 행렬

1980년 5월 20일 밤, 광주역 부근에서 희생된 시민의 시체2구가
5월 21일 리어카에 실려 나와,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공포에 치를 떨었다.

5월 21일 금남로를 가득메운 시민들.
이날 계엄군은 집단발포를 자행하고 계엄군과 시민대표 간의 협상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수없이 쓰러졌다. 항쟁기간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희생된 시민들의 시체는 먼저 도청으로 들어와 신원을 확인한 후 상무관에 안치되었다.

마침내 시민들은 총을 들게 되고

시민군들이 광주의 자체치안을 유지하고
시 외곽지역에서 계엄군의 재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군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고
먹을 것을 모아 실어 나르는
시민들은 부족한 물자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광주를 언론에서는 폐허의 도시,
불순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로
보도했다.

해방기간동안 개최된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모습

5월 27일 광주를 진압한 후 시내 곳곳에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총부리를
겨누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5월 27일 새벽까지 도청을 사수했던
시민군들은 굴비처럼 엮여 끌려가야 했다.

5월 27일 새벽 도청주변에는 이나라
민주주의의 최후를 지키다 희생된
시민군들의 시체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상무관에 안치되었던 희생자들이
청소차에 실려 망월동 묘역으로 갔다.

죽음과 통곡만을 남긴채 막을 내린 10일간의 항쟁.

빈 자리,

고개숙인 학생들의 머릿속에 가득찬 친구의 그리움은
광주시민 모두의 슬픔이였다.

총을 든 군인들로 둘러쌓인 공포스러운 상무대 군사법정에서 시민군은 폭도로 법정에 서고

학살을 자행했던 그들은 16년만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야했다.

청소차에 실려왔던 희생자들은 1997년 5월에 새로 조성된 국립5·18민주묘지로 안장되었다.

국립5·18민주묘지 전경

5·18기념문화센터 사료편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Ⅰ. 5·18민주화운동의 성격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한국 현대사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군부의 12·12 하극상 쿠데타로부터 시작된 정권찬탈음모는 결국 1980년 5월, 광주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은 외형상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의 사망에 따른 권력의 진공상태를 메우려는 일부 정치군인들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작전명칭 : 충정작전)을 계기로 장차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립된 것이 '제5공화국' 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 의 주체들이 영원히 승리한 것은 아니며, 광주시민들이 영원히 패배한 것도 아니었다. 사망자 154명, 행불자 76명, 부상자(상이후 사망 포함)·연행·구금자 등 총 4,4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현황(관련자 보상신청 8,721건 중 인정 5,101건-2008.9.30 기준, 광주광역시 자료제공)으로 수사기간중의 불법연행자만 하더라도 3천여명이었으며 시위기간의 무자비한 연행은 얼마나 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패배가 아닌 역사의 승리였으며, 당시 광주에서 죽어간 생명들은 무의미한 희생이 아닌 부활의 영웅들이

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그 당시에는 패배한 항쟁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 패배를 극복하고 1980년대 반독재 민주의식과 민주화운동을 성장시키는 견인차의 역할을 했다.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올바르게 성격규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그 당시 정부에 의해 '5·18'이 '광주사태', '폭동', '국가전복을 노린 불순한 배후세력의 조종에 의해 발생한 내란' 등으로 발표된 뒤 광주시민은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1980년 5월의 실체가 전국민에게 조금씩 알려졌고 1988년 6공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화합을 모색한다는 미명하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13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치상황이 만들어 낸 광주청문회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 실상과 신군부의 정권찬탈음모가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됨으로써 광주시민의 처절했던 10일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5·13담화에서 『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 희생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5·13 담화조치 이후 진행된 "역사 바로 세우기"는 5·18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1980년 5월 광주를 무참히 짓밟은 신군부 세력에게 '역사와 법과 그리고 정의에 의한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전국민과 광주시민에게 '과거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은 아직까지도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조치 이후 광주에 공수부대를 증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를 진두지휘한 자는 누구이고, 광주시민에게 발포명령을 내린 자는 누구이며, 1980년 당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고, 광주에서 사망한 양민은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신군부의 주역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린 지금까지, 미궁 속에 빠져있는 진상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좌표를 설정하려면 확실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그 역사적 의의부터 규정되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평가 하겠지만, 그간의 논의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민중항쟁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통하여 4·19민주혁명을 부정하고 억압체제를 구축한 군사정권에 저항하여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땅의 민중항쟁을 통해 표출되었던 자주·민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것을 한층 발전시켰던 것이다.

둘째, 5·18민주화운동은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역동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민중이 민족사의 동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그것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노동자·농민·빈민·학생·종교인·문화예술인·지식인·재야인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이와 같은 민족민주운동의 성장이 모

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과 계승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당면 과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셋째, 서양의 역사와는 달리 그동안 우리의 역사에서는 권력에 대한 무력 저항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인간의 자연권인 저항권의 정당성을, 나아가 저항의 수단으로서 '무장투쟁'의 합법성까지 처음으로 공인받았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권력자에 의해서 '무장폭도의 폭동'으로 비하 되었던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다. 갑오농민전쟁, 의병투쟁 등도 아직 공식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민중이 갖고 있는 권리를 5·18민주화운동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넷째, 5·18민주화운동은 억압적인 유신체제를 계승한 전두환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을 부정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결국 그 체계를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각종 정보기구를 동원하여 강압적인 통치를 자행하였지만,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에서 터져 나오는 저항의 물결에 허덕이다가 결국 좌초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서 민족민주운동의 동력이었으며 역사적 근거이기도 했다. 나아가 '제5공화국'을 청산하는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근거로써 과거의 부도덕한 정권을 청산하는 최초의 선례를 남겼다.

5·18민주화운동은 한 시대의 고통스러운 역사의 좌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전진을 기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1980년 이후 전개된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는 5·18민주화운동이 우리 민족사에 무엇을 남기고 우리 후손에게 어떤 역사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Ⅱ. 유신체제의 최후, 그리고 12·12반란

1. 유신체제의 붕괴 - 10·26사건

가. 10·26사건의 정치적 배경

10·26사건은 기본적으로 유신체제의 지배집단과 국민사이의 대립관계에 의해 야기된 정치적 돌발사태였다. 유신체제는 안보라는 미명아래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학문·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전형적인 군사독재체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 특히 지식인층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어 197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변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유신체제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뚜렷한 징후는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이 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은 엄청난 규모의 금권과 관권을 동원하고서도 불과 유효표의 31.7%를 득표한 반면에 야당인 신민당은 그보다 1.1%가 많은 32.8%를 획득했으며 통일당이 7.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자를 위해 만든 유신헌법과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희생시키던 불합리한 정치체제와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은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제10대 총선결과는 유신정권의 유화책을 이끌어내어 김대중 전 신민당 대통령후보가 1978년 12월 27일 형집행면제로 석방된다. 그리고 1979년 5월 29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을 표방하는 김영삼-김대중의 연합세력이 신민당의 지도부로 나섬으로써 국민대중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유신정권에게는 심각한 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이같은 대중의 희망과 유신정권의 위기속에 1979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나. YH여공 농성사건과 김영삼 총재의 제명

한시대의 대 격변을 예고하는 단초는 '가냘픈 여성노동자' 들의 소위 『YH사건』이었다. 1979년 8월 9일 오전, 서울 마포의 신민당사 4층 강당에는 봉제업체인 YH무역주식회사의 여자 종업원 200명이 몰려와 기업주의 폐업에 반발하여 "회사를 계속 경영하여 작업을 하게 해달라"는 폐업조치 철회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유신정권은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폭력을 동원하여 농성을 해산시켰다. 이는 사건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제1야당인 신민당을 탄압·와해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다.

이날 경찰은 '101호 작전' 이라 명명된 진압작전을 위해 정·사복 경찰 1,000여명을 신민당사로 난입시켜 174명의 YH여공들을 순식간에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YH무역 노동조합 간부인 김경숙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중태에 빠졌고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또한 경찰은 총재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김영삼 총재와 당 간부들을 끌어내면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제1야당에게까지 과잉폭력행위를 저질렀다.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었고 박정권은 곧바로 신민당 분열공작을 시도하였다. 8월 13일 윤종완 등 신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 3명이 '신민당 김영삼 총재와 부총재 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9월 8일 오전,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부장판사 조언)는 앞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민당 총재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정운갑씨를

총재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유신정권은 김대중씨의 동교동 자택을 전면 봉쇄하였고, "범국민적 항쟁을 벌이겠다"는 9월 10일의 기자회견과, 미 카터 행정부에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원을 끊으라고 요구한 김영삼 총재의 『뉴욕타임즈』 회견내용을 "반헌정적, 반민족적 작태"로 몰아 국회에 징계동의안을 제출했다. 10월 4일 오후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159명은 여당 의원총회장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YH사건으로 시작되어 야당 총재의 의원직 사퇴로까지 치닫는 일련의 정치적 사태를 보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전례없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학생운동은 2학기 개강과 동시에 YH사건으로 시작하여 유신철폐 요구농성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다. 유신체제 붕괴의 전주곡, 부·마민중항쟁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 "유신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는 일단의 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1,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시위대가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자 학생들은 교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경찰 저지선을 돌파하여 오후에는 남포동 등 부산일대를 누볐다. 부산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성과 참여 속에 부산대생 중심의 '유신반대 시위대열'은 17일 새벽 1시까지 부산시내 11개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마치 대대적인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듯 했다.

17일 부산대에 휴교령이 내리자 이번에는 동아대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

하여 시위에 합류하였고 18일 0시를 기하여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유신정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남포동 일대의 시민·학생 시위대는 "유신철폐, 독재타도"와 함께 "계엄철폐"를 외치며 밤 늦게까지 야간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유신정권이 최세창 준장 지휘의 3공수여단 병력을 투입하여 무차별적인 진압을 자행함으로써 부산시위는 일단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18일 아침,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었던 도시 마산에서 경남대생 1,000여명이 휴교령을 무릅쓰고 교내시위를 벌인 뒤 오후 5시경 마산시내로 진출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만명으로 불어난 시민·학생 시위대는 공화당 경남도지부 사무실을 부수고 이어서 북마산파출소, 유신체제의 핵심권력자인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의 집과 마산시청, 법원, 마산MBC 등 유신체제를 유지·옹호해 온 19개소의 각종 공공건물을 공격했다. 유신정권은 39사단 병력 250여명과 장갑차를 시위진압에 투입하였지만 시위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다음날인 19일에도 시위가 이어지자 19일 저녁 1,500여명의 무장군인이 마산시내에 투입되고 20일부터는 마산·창원지역에 '위수령'이 발동됨으로써 4일간의 "부산·마산민중항쟁"은 막을 내린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부산·마산민중항쟁"으로 체포된 사람은 모두 1,563명이었는데 이중 500여명은 학생이었고 나머지는 노동자, 노점상, 봉급생활자 등 일반시민이었다.

라. 유신독재 최후, 1979년 10월 26일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경, 궁정동 안가 만찬회장에서,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18년 동안이나 장기집권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의해 사망했다. 그것은 지배세력 내 권력 갈등의 결과로 유신체제의 정치적 폐쇄성의 반영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유신체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7년에 걸친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로 상징되는 '겨울공화국' – 시인 양성우의 시 제목에서 표현하듯 – 이 일거에 무너졌다. 유신체제의 최후는 국민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저항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자는 사라졌으나 유신체제를 지탱하고 보위하던 유신세력은 그대로 존속되고 있었다. 특히 지배집단의 한 축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정치군인, 바로 이들 집단이 유신체제를 탄생시켰고 유지시켜온 정치권력의 핵심이었으며 그들의 힘은 엄존하고 있었다.

2. 별들의 전쟁, 12·12쿠데타 – 암호명 '생일집 잔치'

가. 10·26사건 이후 전두환의 위치

10·26사건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10월 27일, 계엄공고 제5호를 통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권력의 핵심이 붕괴된 당시의 상황에서 전두환 소장이 보안사령관직과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임함으로써 전두환은 향후 정국을 예의 주시하던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11월 2일자 보도를 통하여 "전두환 합동 수사본부

장이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군부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거의 굳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0·26의 와중에서 출범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정보·보안·수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직책에 있었다.

나. 쿠데타의 시발, 정승화와 전두환의 갈등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은 그동안 대통령경호실, 육군본부 지휘부, 수경사, 특전사 등 군 요직에 있으면서 특혜를 받아 오던 "정치장교" 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군 인사를 개편하려 하였다. 이는 정승화 총장이 10·26이후 주장해오던 군의 정치불개입 입장을 표면상으로는 기정사실화 하는 조치였고 그 이면에는 군의 공식지휘체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정승화 총장과 전두환 보안사령관 사이에는 향후 정치권력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화합할 수 없는 이견이 있었다. 10·26직후부터 정승화 총장은 "유신체제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전두환 등 소장파 정치장교들은 유신체제의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 정승화 총장의 계속되는 군의 정치불개입 선언과 유신체제의 변화입장에 불만을 토로하던 하던 소장파 정치장교들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타직으로 발령하려는 정승화 총장의 계획을 알게 된다.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노재현 국방부장관과 회동,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지구 경비사령관으로 전보·발령할 것을 협의한 것이다.

자신이 동해안지구 경비사령관으로 전보·발령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전

두환 소장은 1979년 12월 8일, 노태우 9사단장을 보안사령부로 불러 들였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허화평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노태우에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연행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① 정승화 총장과 김재규와의 개인적 친분 ② 정승화 총장의 박대통령 시해장소 참석 ③ 정승화 총장의 김재규로부터의 자금 수수 ④ 정승화 총장의 김재규 사건 축소 지시 ⑤ 정승화 총장의 김재규 재판의 조속한 종결 지시 등 부당한 압력 행사 ⑥ 군 내부의 소장파 장교들의 정승화 총장에 대한 반발 등이었다.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 대하여 동의를 표한 노태우는 D-day를 개각 하루 전인 1979년 12월 12일로 잡은 뒤 전두환 사령관과 함께 하나회 출신 소장파 장교그룹을 설득, 합류시키기로 하였다.

다. 12·12 하극상 반란 – 암호명 '생일집 잔치'

1979년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경, 전두환 소장을 비롯한 하나회 출신 수도권지역 부대지휘관 등 소장파 장교그룹은 비상계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대를 벗어나 "생일집 잔치"라는 암호명에 따라 경복궁내 수경사 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였다.

경복궁 30경비단실에 모였던 군 지휘관 명단

성 명	직 위	기 타
전 두 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육사 11기, 소장
차 규 헌	수도군단장	육사 8기, 중장
유 학 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사 8기, 중장
황 영 시	1군단장	육사 10기, 중장
노 태 우	9사단장	육사 11기, 소장
백 운 택	71방위사단장	육사 11기, 준장
박 준 병	20사단장	육사 12기, 소장
박 희 도	1공수 여단장	육사 12기, 준장
최 세 창	3공수 여단장	육사 13기, 준장
장 기 오	5공수 여단장	육사 12기, 준장
장 세 동	수경사 30경비단장	육사 16기, 대령
김 진 영	수경사 33경비단장	육사 17기, 대령
이 학 봉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육사 18기, 중령

※ 자료출처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1990, 돌베개, 70쪽에서 인용

우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정 총장 연행 책임자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과 육군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2국장인 우경윤 대령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후보계획'을 세운 뒤 정총장 연행조와 후보계획조는 저녁 6시 50분경 한남동 총장공관에 도착했다.

7시 15분경, 정총장을 응접실에서 접견한 이들은 '김재규와 관련된 진술녹음을 위해 녹음시설이 있는 곳으로 모셔가야 겠다'며 대통령 지시라고 거짓으로 강변하였다. 정총장이 화를 내며 '직접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다'고

총장 부관 이재천 소령을 부르는 순간 허삼수, 우경윤 두 대령은 응접실로 들어오는 부관 이재천 소령과 경호장교 김인선 대위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정총장의 "사격중지"라는 외침과 함께 경호실 복장에 M16소총을 든 장교가 총을 쏘면서 대형유리창을 깨뜨리고 뛰어 들어와 정총장에게 총을 들이대었고, 허삼수는 정승화 총장을 강제로 차에 실어 총장공관을 빠져나와 곧장 서빙고 보안사 분실에 감금하였다.

한편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을 재가받기 위해 무장한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 중령을 대동한 채 삼청동 총리공관에 도착, 이미 정총장을 연행해 놓은 상황에서 최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을 재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대통령은 국방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재가를 거부했다. 계속되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재가요청에도 불구하고 최대통령은 요지부동 국방장관을 데려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갔다. 경복궁의 쿠데타 지휘부는 최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고 육군본부에서 지휘관의 부대복귀 명령을 내렸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이들은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고명승 대령으로 하여금 삼청동 총리공관의 경비병력을 무장해제 시키고 자파병력으로 공관을 봉쇄하는 등 최대통령에 대해 사실상의 연금조치를 취했다.

전두환 합수부장과 황영시 1군단장을 포함한 전원이 집단으로 최대통령에게 몰려가 다시 한번 재가를 요청했다. 정총장 연행이 군 주요지휘관들의 일치된 뜻이라고 아무리 설명하여도 최대통령은 끝내 재가를 하지 않았다.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때까지 최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전두환 등 경복궁 30경비 단장실에 모인 지휘관들의 정승

화 총장 연행행위는 명백한 하극상 반란이었다.

라. 육군본부의 반격과 반란군의 불법 무력동원

한편 육군본부는 윤성민 참모차장이 주축이 되어 육군의 공식 지휘계통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예하부대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황영시, 유학성, 차규헌, 노태우 등 일선 지휘관들이 부대를 이탈하여 경복궁에 모인 것을 파악했다.

윤차장은 정총장을 원상회복시키고 지휘관들은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반란군 지휘부는 이를 묵살했다. 이에 따라 육본의 공식지휘부는 정총장의 신병을 원상회복시키고 그를 강제연행한 세력을 응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총장공관의 총격전 소식을 접하자마자 김종환 합참의장과 함께 용산의 미군 벙커로 피신했다. 그리고 정총장의 핵심 측근인 장태완 수경사 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은 장군승진 축하연이 개최되고 있던 신촌의 한 요정에서 비상발령과 정총장 연행소식을 듣고 곧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반란군 지휘부는 밤 10시 30분경 최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재가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은 노재현 국방장관과 가까스로 전화가 연결되었으나 그 역시 총리공관으로 오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정총장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반란군 지휘부는 마침내 힘으로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무력대결을 통한 사태 장악만이 유일한 길' 이라 판단한 전두환 보안사

령관은 박희도 1공수여단장에게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무력진압"을 지시하였고 13일 새벽 1시경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육군본부를 손쉽게 장악했다.

또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3일 새벽 2시경 최세창 3공수여단장과 특전사 보안부대장 김정룡 대령에게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를 지시함에 따라 새벽 3시경 사령관실로 총격을 가하며 난입한 자신의 부하의 총에 총상을 입고 체포당했다.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신윤희 중령으로 하여금 13일 새벽 3시 25분경, 수경사령관실에서 사태논의를 하고 있던 윤성민 참모차장, 문홍구 합참본부장,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을 체포케 했다.

이곳에서 체포된 육군본부 장성들은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됐다.

71방위사단장 백운택 준장은 제2기갑여단장 이상규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도기갑사단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전차부대의 동원을 요청하였고, 노태우 9사단장은 자기 부대인 전방의 9사단 29연대를 즉시 중앙청으로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9사단 29연대와 제2기갑여단 16전차대대는 도중에 합류,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에 진주하였으며 박희모 소장의 30사단 90연대는 반란군 지휘부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청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12월 13일 새벽에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

전두환 소장과 수도권지역 반란군 지휘관들은 육군본부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수도권지역의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육군본부, 국방부, 수경사 사령부, 특전사 사령부 등을 점령하고 육본 수뇌부를 체포, 12·12하극상 반란쿠데타를 성공시켰다.

12·12반란군이 불법으로 동원한 군부대는 다음과 같다.

12·12 반란군 군부대 동원 현황

부 대	병 력	목표지역	점령일시	철수일시	이동위치
1공수여단 (3개대대)	장교 137 사병 755 (1,2,5대대)	국방부 육군본부	12. 13 02:00	12. 25 00:01	통신공무원 훈련원
3공수여단 (2개대대)	장교 108 사병 539 (12, 15대대)	경복궁	12. 13 06:50	12. 14 00:01	한양대학교
5공수여단 (2개대대)	장교 79 사병 410 (21, 25대대)	효창 운동장	12. 13 07:00	12. 26 01:30	장위동 (남대문중학교)
30사 9연대	장교 72 사병 1,058	71훈 712지단	12. 13 06:20	12. 23 11:00	수색 (복귀)
9사단 29연대	장교 109 사병 1,285	중앙청	12. 13 03:50	12. 24 00:01	일산 (복귀)
제2기갑 여단	장교 19 사병 167 (전차 35)	중앙청	12. 13 03:25	12. 17 00:01	금촌 (복귀)

※ 자료출처 : 평화민주당 광주민중항쟁 백서, 20쪽에서 인용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정치장교집단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기반으로 쿠데타를 성공하였고 그들이 모두 반란군에 참여한 시간은 12월 12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13일 아침 이들은 군의 공식지휘계통을 장악한 이른바 『신군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권력을 차지하기까지는 8개월이 걸렸다.

Ⅲ. 민주화의 후퇴

1. 신군부의 등장과 정권탈취 음모

가. 신군부의 최규하내각 장악

12·12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마침내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의 도정에 나섰다. 제일 먼저 신군부는 최규하 정부의 내각장악을 위한 세가지 조치를 취했다. 먼저 비상계엄령의 유지였고, 둘째 합수부의 권한강화와 활동영역의 확대였으며, 셋째는 헌법개정작업의 지연이었다.

또한 신군부는 계엄령을 지속시키는 가운데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회심리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K-공작계획을 치밀하게 준비, 진행시켰다.

먼저 신군부는 유신관료집단인 신현확내각 장악에 나섰다.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 합수부장으로는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공석중인 중앙정보부장 겸직이 절실히 필요했다. 1980년 3월말경, 전두환은 신현확 총리의 사무실에서 "중앙정보부장 겸직"을 주장했고, 이에 반대하는 신총리에게 "1980년 1월 29일 석유값 59.4%인상 배후 의혹이 있어 조사를 지시했다"는 협박을 가해 신총리의 암묵적 동의를 얻어냈으며, 4월 14일 최대통령은 전두환을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했다.

이는 당시 중앙정보부법 제7조에 명시된 "중앙정보부장의 타직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전두환은 4월 14일 이전에도 국무회의에 참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의진행을 위한 실무자로서 보고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겸직 이후부터는 실무자가 아닌 '주요각료급' 의 일원으로 최규하 정부의 신현확 내각이 결정하는 정책방향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나. K - 공작계획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여 신현확 내각을 무력화 시킨것이 유신관료집단의 주도권 완전박탈 조치였다면 언론장악은 국민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의 장악이었다.

신군부는 정권찬탈을 위해 1980년 2월 1일, 보안사령부내 정보처를 복원, 기구를 대폭 확대한 후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치밀한 정치공작을 전개했다. 특히 보안사의 이상재 준위가 팀장인 '언론조종반' 에 의해 1980년 3월경 작성된 'K(King의 약자)-공작계획'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K-공작계획은 1980년 당시 보안사령부의 대외비 문서로서 1989년 12월 29일, '전두환 청문회' 를 앞두고 이철의원이 국회 5공특위와 광주특위 위원장에게 제출, 국회에서 공개한 것이다.

'K-공작계획' 의 목적은 신군부의 집권을 정당화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데 있었다. 신군부는 '언론공작반' 을 통해 "호도된 민주화 여론을 언론계를 통해 안정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① 보도검열단을 통한 봉사활동 ②

언론계 중진들과의 개별 접촉 회유공작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 등 언론사 사장 및 간부 94명을 차례로 접촉, 회유공작을 실시했다. 이 공작은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만이 "혼란의 확대재생산"을 막을 강력한 세력임을 주입시키기 위함이었다.

'K-공작계획' 의 내용 중 특기사항은 "공작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할시는 사전에 사령관의 재가를 득한 후 실시"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K-공작계획서' 를 작성한 곳은 보안사령부이고 당시 보안사령관은 다름아닌 전두환으로서 전두환 자신이 계획과 실행, 실행 과정상의 문제점 발생에 따른 수정 · 보완까지 일일이 간여할 만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권력찬탈 음모를 치밀하게 진행시켰다.

다. 충정훈련

한편 신군부는 정권찬탈을 위해 1980년 2월 18일, 육군본부의 명령으로 충정부대 및 후방 주요부대에 '충정훈련' 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소위 '충정훈련' 은 공수부대라는 특전부대를 중심으로 대도시 부근 일반부대까지 실시하였는데 이들을 '충정부대' 라 했다. 강력한 충정훈련을 실시케 한 신군부는 대학가의 개학을 앞둔 3월 4일부터 사흘간 충정작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CPX 및 FTX 훈련을 실시하고 이어서 3월 6일 1980년도 제1차 충정회의를 소집했다.

이날의 충정회의에는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1, 3, 5, 9공수여단장, 20, 30, 26사단장 및 해당부대의 작전참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태우 소장이 사령관으로 있던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열렸다.

충정부대의 주력은 공수부대로 4월경 진압봉(길이 45~70cm, 직경 5~6cm, 재질 물푸레나무 혹은 박달나무)을 제작, 폭동진압 충정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충정훈련의 실시 목적은 시위진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 진압 훈련으로써 시위대를 향해 돌격하여 와해시킨 뒤 재집결 불허와 분쇄 및 주모자를 체포하는 훈련이었다. 또한 신속한 시위 진압을 위해 기동에 유리한 경무장과 진압봉을 반드시 휴대하게 하였다.

신군부는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을 '맹목적 저항세력'으로 규정짓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즉 투옥시키고 그래도 안될 때는 '강경한 응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항쟁 초기 공수부대 지휘관들이 시위확산을 방지하고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둔 경찰의 진압방식과는 달리 병력을 돌격시켜 시위대를 무지막지하게 분산시킨 다음 재집결을 분쇄하고 주모자를 현장에서 색출·살상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술을 채택하고 훈련한데서 나온 결과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와 목 등 급소만을 겨냥하여 특수하게 제작한 진압봉을 휘두르고, 총에 꽂은 칼로 찌르기까지 했으며 붙잡힌 시위대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긴 다음 트럭에 짐짝처럼 던져 군부대에 수감했으며 수감상태에서도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2. 1980년 서울의 봄.

가. 1980년 봄의 학생운동

1979년 11월부터 학생회 부활논의를 시작한 전국의 대학생들은 1980년 봄의 학생회 부활운동에서 시작하여 학원민주화투쟁을 거쳐 계엄해제와 유신잔당의 퇴진을 겨냥한 대대적인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신학기 대학가는 각종 써클이 공개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대자보가 등장하여 연일 신군부와 최규하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고 유신정권의 비행을 폭로·질타했다. 총학생회 선거 열풍이 지나가자 대학은 민주화투쟁을 준비하는 거대한 기지로 변해갔다. 1980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 출범을 시작으로 4월 초순에는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그 뒤를 따랐다.

학생운동은 학생회 구성작업이 마무리된 시점까지 일체의 과격한 투쟁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치적인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자제했다. 3월은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4월은 학원민주화투쟁 시기였다. 이 투쟁은 족벌사학에 대한 학생들의 시위·농성으로 시작되었으나 학원민주화투쟁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 4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병영집체훈련문제가 학원민주화투쟁의 이슈로 전면 등장했다.

각 대학의 병영집체훈련 거부투쟁이 본격화되고 이 문제가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르자 신군부는 신문, 방송을 통해 '학생들의 안보의식 결여'를 비난하고 교내 시위·농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했다. 이 공방은 조만간 다가올 신군부와 학생의 일대 격돌을 예비하는 전초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4월 14일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보도가 나

오고 입영훈련 거부투쟁과 맞물리면서 대학가에 투쟁의 진로와 방법에 대한 이견과 노선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 학생운동은 5월 1일, 서울대가 입영훈련 거부투쟁 철회를 결정하고 5월 2일부터 '계엄령 해제'와 '유신잔당퇴진', '정부개헌 중단'과 '노동 3권 보장' 등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학생운동은 학내민주화운동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정치투쟁으로 돌입했다.

5월 2일이후 13일까지 열흘 남짓한 기간은 학생운동이 본격적인 가두투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5월 10일 고려대 총학생회장실에서 열린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전국 23개 대학 대표들은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와 '전두환, 신현확 등 유신잔당 퇴진요구' 등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세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항간에 유포된 '5월 봉기설'에서 쿠데타의 명분을 찾으려는 신군부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당분간 평화적 교내시위만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5월 12일 밤 가두진출을 주장해 온 강경파 학생들의 광화문 일대 시위로 학생운동은 전면적인 '민주화투쟁'을 위한 가두시위로 나서게 된다.

나. 동상이몽 속의 정치권

1980년 봄의 정치권은 최규하 정부와 정치권 전체의 대립·갈등과 정치권 내부에 있어서 3김씨 사이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국민연합'으로 결집해 있던 재야민주인사들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성격

을 지니고 있었지만 김대중씨를 매개로 정치권의 변화와 맞물려 움직였다.

1980년 1월 9일, 각 신문, 방송에 대서특필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은 정치권에 심각한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최규하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연두기자회견이나 정부개헌심의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절충형 정부형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론 파문은 개헌의 주체와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적 전망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공화당과 신민당 그리고 재야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의 3김씨는 최규하 정부의 이원집정부제 개헌주도 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개헌의 주체로 나서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런 가운데 '친여 신당설'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1979년 12월경부터 퍼지기 시작한 소문이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유정회 국회의원, 전직 장관, 김종필 총재와 불편한 관계인 TK출신 공화당 의원, 그리고 최규하 정부의 각료들까지 포함한 신당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당설은 혼미를 거듭하던 정국전망을 한층 더 어둡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개헌주도권을 둘러싼 관료집단과의 대결국면에서 잠시 협력했던 3김씨는 개헌을 전제로 대권을 향한 경쟁을 시작했다. 1980년 2월 28일 김대중씨가 복권되어 합법적인 정치활동의 권리를 찾은 후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사이의 정치적인 실력을 겨루는 경쟁이 치열해지자 야당인 신민당은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그러나 당시 양김씨의 시국인식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구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신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인내와 자제만을 요청하고 있었다.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는 김대중·김영삼씨간의 경쟁을 '추악한 파벌싸

움' 으로 몰고가는 신군부의 여론조작을 관망하면서 신민당이 4월 14일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임명문제, 학원사태 등 시국상황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계속해서 기피했다.

학생들의 교내 정치투쟁이 가열되면서 5·15총궐기설이 끈질기게 나돌자 양김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령 해제' '임시국회 소집' '정부개헌 작업의 중지' 등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민당의 계속적인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공화당은 20일 이후에나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며 시국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착각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렇게 정치권이 미로를 헤매고 있을 때 신군부는 '충정부대' 를 전국의 주요도시에 투입할 계획을 최종점검하며 일부 병력은 이미 점령목표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국대학생들의 노도와 같은 가두시위로 1980년 봄의 가장 강력한 두 세력간의 사활을 건 전면전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나흘간이 숨가쁘게 지나간 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김씨는 그날이후 이땅의 국민들이 다시금 그들을 부를때까지 역사의 전면으로 나설 수 없게 되었다.

다. 서울역 회군

1980년 5월 14일 새벽 4시 30분경, 고려대 총학생회장실에서 서울지역 27개 대학의 총학생회 대표 40여명이 모여 14일 오전부터 전면적인 가두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한다. 1980년대 한국정치의 향방을 결정지은 운명의 나흘간이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학생대표들이 헤어진 뒤 7시간이 지난 14일 정오를 전후하여 서울시내 대학생 7만여명이 일시에 교문을 박차고 나왔다.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유신잔당 타도하자” “언론자유 보장하라” “정부개헌 중단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등을 외치며 학생시위대는 영등포, 청량리 등을 거쳐 광화문으로 수만명이 진출하였다. 이 가두시위에 시민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신말기의 탄압속에서 사회운동세력은 조직적 역량을 제대로 갖출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타오르기 시작한 가두시위투쟁의 불길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15일 오후, 서울역에는 10만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집결했다.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목포, 청주, 춘천, 천안 등 대학이 있는 거의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 이날 서울 이외 지방에는 24개 대학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감행하여 경찰과 충돌하였다.

서울역 광장에 운집한 학생들은 역광장을 중심으로 연좌하면서 신군부와 최규하 정부에 대한 대규모 성토대회를 벌였다. 학생들의 가두시위라는 돌발적인 사태를 접한 정치권은 황망하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며 신민당은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김종필 공화당 총재도 정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방법에 의한 사태해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각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은 이른바 ‘서울역 회군’을 결정한다. 그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심야에 군과 충돌한다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입수된 병력이동 정보를 점검해볼 때 곧바로 군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짙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서울역에 있던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했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대학가는 거짓말처럼 평온해 졌다.

16일에는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 학생들이 도청앞 광장에서 대중집회를 연후 야간에 평화적인 횃불행진을 벌이는 등 일부 지방대학의 시위가 있었으나, 토요일인 17일에는 그나마도 자취를 감추었다. 각 대학의 교정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학생들의 가두시위는 민주진영의 모든 세력들을 신군부와 최규하 정부의 유신부활음모 분쇄를 위한 공세에 나서도록 고무하고 촉진시켰으며 표면상으로는 전두환의 신군부가 마치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 무렵 신군부의 치밀하고도 무자비한 공세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3. 1980년 봄 광주의 상황과 '5·17' 비상계엄령 확대

가. 민족민주화성회

타지역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광주·전남지역은 당시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역량은 전남대 학생운동에 있었고 조선대학교 등에서는 학원민주화투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0·26사건' 과 '12·12사태' 를 거치면서 전남대학내에서는 그동안의 반민주세력 및 반민주적 요소의 청산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그동안 학생들의 관제기구로 전락했던 학도호국단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학자추' 의 작업은 결실을 맺어 총학생회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어

박관현(법학과 3년)이 압도적인 지지로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명실 공히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총학생회가 학원민주화투쟁을 주도해 나가게 되면서 어용교수 퇴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동안의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학생들의 내적인 단결을 고양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국적인 상황 전개에 영향을 받은 때문인지 전남대 학생들은 5월초를 분기점으로 운동의 초점을 전환시키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구체제 복귀 조짐과 더불어 신군부의 정권 찬탈 음모가 소문으로 전달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학생운동은 학내민주화투쟁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방향전환은 당시 5월 6일의 '전남대학교 비상학생총회' 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비상학생총회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을 '민족민주화성회' 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5월 8일에 열린 '민족민주화성회' 에서는 전남대 총학생회와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공동명의로 제1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은 5월 14일까지 '비상계엄을 해제' 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대학에 휴교령이 내린다면 온몸으로 거부할 것이며, 양심있는 교수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였다.

이러는 사이 일반학생들의 정치적 열기는 날로 고양되어 가고 있었다. 이들은 교내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점차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고, 5월

14일 '민족민주화성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예정을 하루 앞당겨 당장 가두로 진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전남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5월 14일 오후부터 가두시위를 결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날 오후 2시 총학생회의 지휘 아래 전경대의 저지를 뚫고 교문을 돌파한 전남대생 7천여 명은 오후 3시에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하였다. 이날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시민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군부 세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겁을 먹고 구경만 하는 자세였다. 이날 도청 앞 집회에서 대학생들은 만약 휴교령이나 휴업령이 내린다면 일차적으로는 오전 10시 학교 교문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12시 정오에 도청 앞 광장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가두시위는 다음날인 15일에도 계속되었다. 오전에 전남대에서 '제3차 민족민주화대성회'를 마친 1만여 명의 전남대 학생들과 조선대 · 광주교대생 1만여 명, 전남대교수, 청년, 시민 등 수 만명의 인파가 도청 광장에 집결했다. 또 16일에는 광주 일원의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들과 일부 고등학생들까지 합류한 일반시민 등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렸으며 밤이 되자 사흘동안의 민주화성회를 마무리하는 횃불시위가 열렸다. 광주시내의 주요 도로를 누비는 이 횃불시위로 14일 이후 이루어진 시민, 학생들의 민주화시위는 장엄하게 마무리되었다.

이제 자신들의 의사는 충분하게 전달했으니 정부 측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17, 18일은 쉬기로 했다. 정부가 계엄해제와 향후 정치일정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다시 성토대회를 벌이기로 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신군부가 다음날의 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학생·시민들의 민주화시위가 연 3일째 계속되었음에도 이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는 별다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학생시위에 대한 여론의 엄청난 지지 때문인지 경찰은 시위대의 주변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정도였고, 이러한 경찰들에 대하여 학생들도 음료수 등을 전달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꾸어 나갔다.

나. '5·17' 비상계엄령 확대조치

'10·26사건'으로 야기된 지배권력의 내부적인 혼란이 신군부의 헤게모니 장악으로 일단락되면서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영구화하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국민들이 민주화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권력의 표면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신군부는 무력으로 사회운동을 굴복시키고 자신들이 전면에 등장하여 명실상부하게 권력을 장악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치권의 각 세력들도 학생과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신민당은 5월 14일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비상계엄해제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인 공화당 조차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로써 5월 20일경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계엄해제안을 양당이 공동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여기에 유정회까지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자 계엄령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신군부의 위기감은 증폭되었다.

명분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궁지에 몰린 군부는 예정대로 무력 사용을 통해 위기상황의 정면돌파를 시도하였다. 대학가의 시위가 가열된 5월 12일에는 전군에 비상이 발령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공무원들에게도 비상근무령이 내려졌다.

17일 10시 국방부에서는 계엄사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①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② 각급 학교 휴교조치 ③ 국회해산 ④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의 설치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회의결과는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군의 결의를 받아들인 최규하대통령은 17일 자정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는 전국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런 조치는 그 자체 내에 이미 새로운 불씨를 안고 있었다. 즉 '5·17계엄확대'는 대다수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고, '10·26' 이후의 일련의 개량적인 변화들로부터도 완전히 후퇴한 것이었다. 아무튼 계엄확대와 더불어 발표된 '계엄포고 10호'를 통해 ①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② 대학 휴교 ③ 옥내외 집회·시위 및 전·현직 국가원수 비방금지 ④ 직장이탈 및 파업 불허 ⑤ 언론 사전검열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 26명을 연행하였다.

한편 경찰은 이미 5월 17일 오후 전국학생회장단모임이 열리고 있던 이화여대를 급습하여 수십명의 학생대표를 연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5월 17일

자정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민주인사들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행하여 수백명을 강제연행하고 있었다.

한편 군과 경찰이 이미 행동을 개시한 17일 광주시내의 각 대학은 그동안의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한산한 분위기였다. 그날 밤 자정을 전후해서 광주의 각 대학은 계엄군에 의해 점령당했으며, 광주지역의 사회운동·학생운동의 지도자 상당수가 검거되었다.

다. 5월 17일 충정부대의 이동상황

신군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여유도 없었다. 국무회의가 계엄확대안을 의결하기 수시간 전인 오후 6시경 합동수사본부는 경찰병력을 이끌고 이화여대를 급습하여 다수의 학생대표를 체포한데 이어 충정부대 역시 초저녁부터 작전에 들어갔다. 신군부의 쿠데타 2단계 음모가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군의 기록에 나타난 충정부대의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육군본부 작전처장, 전군에 작전참모 정위치 지시(16:50) : 1, 2, 3군 작전참모 및 관구 작전참모, 사단 작전참모는 정위치에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의 지시받을 준비를 할것.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

② 육군본부에서 2군사령부에 5월 18일 00:01부로 충정작전 유효지시(19:40) : 학교점령은 04:00이전, 불순분자 체포는 00:01이전까지 완료. (전교사 전투상보)

③ 제7특전여단 부대 투입을 위한 차량 34대 지원(21:15). (특전사 전투상보)

④ 육군본부 전군의 충정부대 투입명령 하달(22:30) : 1, 2, 3군 및 수경사,

특전사 충정부대.(특전사 전투상보)

⑤ 육군본부, 충정작전 해당부대 작전요원에게 정상근무 지시 (22:40).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

⑥ 육군본부에서 2군사령부에 추가지시(22:45) : 학교점령은 02:00이전에 완료할 것. (전교사 전투상보)

⑦ 2군사령부에서 전교사에 충정작전 5월 18일 00:01부로 유효지시 (22:45) : 학교점령은 전북지역이 01:30이전, 전남지역이 02:30이전까지 완료. (전교사 전투상보)

※ 자료출처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1990, 돌베개, 139, 140쪽에서인용

Ⅳ. 5·18민주화운동

1. 5·18민주화운동의 발발-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가. 비극의 시작

1980년 5월 17일 21시 40분, 임시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을 의결하자 신군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 신속히 군대를 투입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가 신군부의 주요한 공격 목표였다. 서울에는 1, 3, 5, 9, 11, 13공수여단이 배치되었고 광주에는 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가 전남대와 조선대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오직 '시위진압훈련'에만 몰두해 온 신군부의 정예부대로서 전투장비로 완전무장하고 내려왔다.

공수부대는 유사시 적 후방지역 깊숙히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적의 비정규전을 대비하는 특수 부대였다. 평시에는 침투작전 및 충정작전에 대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공수부대는 강한 훈련과 체력단련을 통해 육군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부대이다.

이 공수부대는 낙하훈련과 정기적인 천리행군 등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임무의 특수함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의 어려움은 일반 보병부대와는 다르게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최고의 군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부대를 박정희 정권 이래 소요진압을 위한 충정작전의 중요 수행부대로 사용하여 왔으며 1980년 5월의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되어 무력 진압하였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7공수여단 33, 35대대 광주투입경위와 병력 및 출동장비 현황

일 시	내 용	출 처
5. 14. 13:40	특전부대 이동을 위한 차량 245대 지원 지시	육본, 정기작전보고 80-5
17:05	885수자대, 전남·광주에서 7공수(금마)로 차량 31대 이동	
5. 17. 22:30	부대투입 작전명령 하달	
22:37	7공수여단 33, 35대대 금마 출발	육본, 작전상황일지

※ 자료출처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1990, 돌베개, 156쪽에서 인용

구분 \ 대대		33대대	35대대	본 부	비 고
출동 병력		45/321	39/283	10/76	장교/사병
M16 실탄		24,600발	24,600발	600발	개인당 60발
권총실탄		154발	154발	84발	
개스탄(사과탄)		100발	100발		
M60 실탄		3,200발	3,200발		
분말 개스(CS)		3통	3통		
차량	1/4톤	1대	1대		
	2 1/2톤	19대	18대		

※ 자료출처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1990, 돌베개, 139, 140쪽에서 인용

나. 7공수여단과의 첫 충돌

계엄확대로 인한 당국의 연행을 일단 피한 전남대 총학생회 지도부는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상호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학생지도부의 상당수는 이미 검거되었으며, 검거되지 않은 지도부와의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불과 1시간 뒤인 오전 9시경에 일어날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일단 몸을 피하게 된다.

그 결과 5·18민주화운동의 최초의 도화선이 된 18일 아침의 전남대 교문 앞 시위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나왔다가 계엄군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된 학생들이나 '휴교령이 내리면 그 다음날 10시에 교문 앞에 모이자' 고 했던 당초의 약속을 기억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학생들에 의해 완전히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전남대 정문 앞에는 완전무장한 7공수여단 33대대(대대장 권승만 중령)가 교문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은 휴교령이 내린 사실을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귀가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고, 10시가 넘어서자 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100여 명의 학생들이 정문 앞 다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수가 200~300여 명으로 불어나자 자연스럽게 노래와 구호

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공수부대원들은 함성을 지르며 돌격, 진압을 개시 하였다.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의 진압에 맨손인 학생들의 저항은 무기력하였다. 진압봉으로 가차없이 머리를 갈기는 공수부대원들에게 학생들은 부상자 십여명을 남긴 채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도망치지 않았다. 뒤로 밀려나는 와중에서도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광주역 광장에 재집결하여 대오를 정비한 300~400여 명의 학생들은 우선 금남로 도청 앞 광장을 목표로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을 지나서 가톨릭센터 앞까지 진출하였다. 당시 이들이 외친 구호는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씨 석방하라' '휴교령을 철회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초기 시위대는 아직 소수였으며, 전투경찰의 진압에도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 다닐 정도였다.

다. 광주를 무차별 진압하라. –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공수부대는 아직은 광주시민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18일 오후까지의 학생시위는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7공수여단은 주둔지였던 대학교내를 나와 오후 1시경 수창초등학교에 집결하였다. 이어 오후 2시경 수창초등학교 부근에서 학생 60여명이 "계엄해제"구호를 외치며 공수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오를 정비한 공수부대는 순식간에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과 함께 무자비한 강제해산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후 4시경 7공수는 도청방향으로 전진하면서 금남로 및 가톨릭센터, 충장로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시위진압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시위진

압을 개시하자마자 시위가담여부와 상관없이 도로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쫓아가서 곤봉으로 때리고 구타하였다. 또한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여럿이 몰려들어 무차별로 때리고 짓밟았다. 그리고는 쓰러진 사람들을 질질 끌고 가 트럭에 실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위진압이 아니었다.

오후 5시쯤에는 청산학원 근처에서 처참한 살상극이 벌어졌다. 공수부대가 진입한 곳은 단 30분도 못되어 거리가 조용해졌으며 길바닥에는 군데군데 핏물이 흥건히 고였다.

이날 계엄군은 전국의 모든 주요도시에 진주하였다. 사실 학생운동 지도부의 지도력이 마비된 상태에 있기는 광주나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였다. 휴교령이 내릴 경우 학생들의 행동지침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계엄확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학생시위를 감행했던 곳은 오직 광주뿐이었다.

이미 18일 오후부터 학생시위를 통해 '김대중의 체포와 전두환의 쿠데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 속에서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김대중이라는 동향 출신 정치인의 핍박과 수난을 자신들과 동일시 해 온 광주시민들은 그의 투옥을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무참하게 좌절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시민들은 시위학생들에 대해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도 이같은 유혈극에 너무도 겁에 질려 항의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7공수부대원들의 행동반경은 금남로 등 시내중심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도주하는 학생과 청년들을 뒤쫓아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민가에까지 들어가 젊은 남자들을 보이는대로 끌어내어 무자비하게 두들겨 팬 후,

옷을 벗기고 포박하여 연행해 갔다.

단지 소수의 학생들만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서로 격려해가며 7공수병력의 추격을 피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오후 5시 15분경 전남도청 옆 노동청 앞에 약 500~600명 정도가 모여 시위를 벌였지만 공수부대가 강력히 돌진하자 곧바로 해산 된다. 오후 7시경 계림동 광주고 부근에 수백명의 청년, 학생들이 나타나 공수부대에 맞섰지만 역부족이긴 마찬가지였다. 밤 8시 15분경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 학생·시민 약 600여명이 공수부대와 투석전을 벌였지만 단 10분만에 해산당하고 만다.

5월 18일의 시위는 이것이 전부였다. 상무대에 있는 전남·북계엄분소는 오후 6시 '계엄공고 제4호'를 발표하여 당시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통금시간을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밤 11시 20분경에는 계엄군 1개 지대와 경찰 1개 분대씩을 묶어 광주시내 36개 주요지점에 전투경찰과 합동으로 배치시킨 뒤 삼엄한 경계를 폈다.

5월 18일의 7여단 33대대와 35대대의 시위진압 행위는 광주시민을 상대로 한 학살극이라 불러야 할 만큼 무자비하고 광폭했다. 그들은 진압봉을 주로 사용했고 부분적으로는 대검을 진압무기로 사용하기도 했다.

2군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에 의하면 5월 18일 하루 연행자가 대학생

114명, 전문대생 35명, 고교생 6명, 재수생 66명, 일반시민 184명 등 405명이나 되었는데 이중 68명이 두부외상, 타박상, 자상(대검사용에 의한 부상) 등을 입었고 12명은 중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연행자와 부상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

2. 5월 19일의 상황

가. 11공수여단의 광주 추가 증파

신군부는 광주시내의 시위진압 출동이전인 5월 18일 오후 2~3시경 11공수여단을 광주에 증파하기로 결정한다.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5월 18일 점심 직후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소장이 "광주사태가 악화될 조짐이 있어 3특전여단을 증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자 이를 11공수여단으로 교체할 것을 전언, 11공수여단이 광주에 증파된 것이다. 정호용 사령관은 11공수여단의 광주증파 이유가 "7공수여단의 2개 대대가 소요진압작전을 못하고 고전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7공수여단의 광주시위진압 출동시간은 그런 결정보다 2~3시간 뒤인 오후 3시 50분에서 4시 사이였다. 따라서 이날의 11공수여단 병력증파 결정은 광주현지의 실제상황이나 현지 지휘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려진 것이다. 5월 18일 오후 3시로 광주 출동명령을 받은 11공수여단은 오후 4시30분경 K-57(성남비행장)에서 C-123 수송기 5대에 탑승, 광주로 이동하여 오후 6시 30분경 조선대에 도착하였으며 잔여부대 병력은 다음날 5월 19일 밤 1시 50분경, 조선대에 도착하였다.

11공수여단 출동병력 및 장비현황

계	61대대	62대대	63대대	본부
162/1,038 (장교/사병)	43/277	43/306	42/275	34/180

구 분	종 류	수 량	탄 약	비 고
화 기	M-16	1,139정	개인당 60	대간첩작전 기준에 의거 각종 탄약을 휴대하였음.
	50MG	2정	발	
	M-60	3정		
	M-203	81정		
화 학	C.S탄	1,143정		
	사과탄(M25 A7)	303정		
	화염방사기	6대		
통 신	P-77	130대		
	U-87	18대		
	메가폰	12대		
기 동	2.5톤 차량	4대		
	3/4톤 차량	2대		
	1/4톤 차량			
	방송사	1대		

※ 자료출처 : 평화민주당 광주민중항쟁 백서, 72, 73쪽에서 인용

나. 공포의 금남로

공포와 불안으로 하루를 보낸 다음날인 19일 광주지역은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는 정상수업을 계속했고, 관공서나 기업체, 공장 등은 대체로 정상근무를 하였지만 일손을 거의 놓고 18일의 공수부대 만행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시내 중심가의 상가들은 대부분 철시한 상태였으며, 이른 새벽부터 군인과 경찰들이 시내 전지역에 걸쳐서 삼엄한 경비를 서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 금남로는 일체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서 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시내로 나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자며 몇 명씩 짝을 지어 금남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경 금남로에 모여든 군중은 2,000~3,000명으로 불어났으며, 자연스럽게 군경의 저지선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이미 학생들은 별로 없었고,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10시 40분부터 경찰과 공수부대는 최루탄을 쏘며 적극적인 해산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제의 잔인한 진압에 분노하고 있던 시민들은 그냥 쫓겨가지 않고 야유를 보내고 돌을 던지며 항의했다. 군경과 시민의 충돌이 시작된 지 30분 정도 지나서 군용트럭 30여 대에 분승한 공수부대가 도청 앞과 광남로 사거리에 진출하여 시

위군중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19일 새벽 4시경 모든 이동을 마친 11공수여단 병력 1,140여명이 시위진압에 나선 것이다.

11시 30분경 또다시 공수부대의 시위진압이 시작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잔인한 살육전이 전개되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항의하던 할아버지와 아주머니, 도망가던 여학생, 버스기사, 학원에서 공부하던 어린 학원생들 모두가 그들의 진압 대상이었다.

공수부대원들은 3~4명이 한 조가 되어 시위현장 주변의 건물이나 집들을 샅샅이 뒤졌으며, 그 안에서 젊은 사람이 발견되면 무작정 두들겨 팬 뒤 연행하였다. 붙잡힌 시민들은 팬티만 남기고 발가벗겨진채 군 트럭에 실려 갔다. 당시 광주지역에 투입된 공수부대는 그들의 작전명칭이 그러했듯 '화려한 휴가'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폭력은 시내 중심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가지 전역에 걸쳐서 자행되고 있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만행이 백주대로에서 자행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19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시위 양상은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시위의 중심세력이 대학생에서 시민대중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는데 바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시위진압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시민들이 시위대열에 합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이날 낮부터 광주 시내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줄지

어 입원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트럭에 실려가지 않고 중상을 당한 채 달아났거나 주위의 도움으로 계엄군의 무자비한 손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중경상을 입은 많은 부상자와 죽어가는 사람수에 비해 광주 시내의 병원시설로는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정부측에서는 광주에서의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각종 보도매체들도 계엄당국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광주의 상황과 관련된 보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19일 밤, 시위를 마치고 해산한 광주시민들은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일념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대대적인 민중항쟁의 조건이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항쟁은 신군부 스스로 자초한 또는 의도적으로 야기한 것이다.

전투교육사령부가 항쟁이 끝난 직후 군의 시각에서 정리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은 광주시민이 공수부대에 맞서 죽음을 불사한 항쟁을 벌이게 된 원인에 대해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해산보다는 체포 주안으로 협공, 소요진압 중 지역주민이 보는 가운데 폭동군중과 격렬한 충돌 발생, 도피군중을 추적·체포하는 과정에서 기물파괴, 가족위협에 대하여 시민들의 야만적 감정 폭발" "소요진압 중 발생된 사

상자 및 체포자의 처리 지연과 장기간 노상방치로 주민들의 감정을 촉발"

군의 자료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7공수와 11공수여단의 초기진압작전은 정당한 진압과 과잉진압이라는 논쟁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명백한 학살이었다.

한편 이날, 미국의 태평양지구 공군사령관인 휴즈 중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전술 공군기들은 매우 빠른 시간내에 한국전선으로 출격할 것이며, 어떠한 북한의 공중공격도 격퇴할 능력을 한미 공군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3. 5월 20일의 상황

가. 31사단의 반발과 3여단 증파

7여단과 11공수여단은 형식상 광주의 31사단에 배속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제는 신군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 공수부대들은 31사단과 전교사에 작전상황조차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웅 31사단장과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은 18일 저녁까지 시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부로부터 광주시내에서의 공수부대 만행을 전해들은 정웅 31사단장은 '31사단 작전명령 제3호'를 통해 유혈진압이 아닌 무혈진압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군 충정작전지침 추가지시'를 통해 광주에서 '바둑판식 분할 점령'과 '시위대를 조기에 분할 타격 체포할 것' 그리고 '소요군중의 도피방지책 강구'와 더불어 '과감한 타격'을 가하라는 더욱 강력한 시위진압명령을 내린다.

또한 신군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경 3공수여단 5개대대를 또 다시 광주에 증파하기로 결정했다. 7여단이 시위진압에 투입되기도 전에 11여단의 광주 증파 결정이 내려진 것처럼 11여단이 광주 시내에 투입된 19일 오전 10시보다 훨씬 이전에 증파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5월 19일 밤 12시, 청량리역에 도착한 3공수여단은 5월 20일 새벽 1시경 열차를 이용, 서울을 출발하여 아침 7시경 광주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광주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총원은 3,400여명으로 불어났다.

3공수여단 출동병력 및 장비현황

계	11대대	12대대	13대대	15대대	16대대	직할대
255/1,137 (장교/사병)	40/198	47/192	45/205	45/206	44/220	34/116

구 분		수 량	탄 약	비 고
화 기	M16소총	1,307정	개인당 60발	대간첩작전 기준, 각종 탄약휴대
	권총	85정	개인당 14발	
	M60 기관총	5종	정당 2,000발	
	M203	104정	개스발사기 : 24정 장약 : 102발	자대제작, 지역대당 1정씩사용
화 학	화염방사기	9대		
	E-8 발사통	6대		콤프레샤 : 2대
	개스탄	2,880발	C.S탄 : 1,837발 사과탄 : 1,043발	
	진압봉	2,102개		추가 수령 : 700개
통 신	P-77	145대		통신
	U-87	7대		대대당 1대씩 사용 통신근무대대 2대 사용
기 동	1/4톤 차량	12대		
	방송차	1대		
	레카차	1대		

※ 자료출처 : 평화민주당 광주민중항쟁 백서, 85쪽에서 인용

나. 항쟁의 징후와 첫 발포

지난밤부터 내리던 비는 20일 오전 9시경 그쳤다.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비를 맞으며 변두리 지역에서부터 시내 중심가로 몰려들고 있었다. 시내에는 여전히 공수부대가 지키고 있고, 시민들은 어제 공수부대 만행으로 보

아 오늘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집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시위대와 공수부대의 접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공수부대는 어제와 좀 다른 데가 있었다. 그들은 M16소총에다 대검을 착검하지도 않았고, 말씨도 공손했다. 술 냄새를 풍기거나 눈이 벌겋게 충혈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20일 오전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별다른 사건 없이 대체로 소강상태를 이루면서 지나갔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광주시가지는 다시 팽팽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어림잡아도 10만이 넘는 인파가 금남로를 뒤덮었다. 이제는 시장의 상인들까지 장사를 치우고 시위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내의 도처에는 「투사회보」라는 지하유인물이 수천매식 뿌려지고 있었다. 「투사회보」는 윤상원이 중심이 된 광주지역의 사회운동 진영에서 관제언론과 정부의 거짓된 선무방송을 이겨내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었다.

오후 3시, 금남로의 시위대는 수만 명으로 불어났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드디어 경찰의 최루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금남로의 시위군중과 경찰 사이에 공방전이 시작되었고, 시민들은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몰려드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또 다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력과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났으며, 도망치거나 방관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들 결사적이었다. 도청 앞 광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에는 시민들의 대열이 밀물처럼 밀어 닥쳤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흥분한 택시운전사들까지 시민들의 투쟁대열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200여대의 자동차가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켠 채 무등경기장을 출발하여 저녁 7시쯤 금남로에 들이 닥쳤다. 이 엄청난 자동차 시위행렬은 일시적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시위군중들의 전의에 다시 새로운 불을 질렀다. 차량행렬이 금남로에 이르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저지선 앞에서 대치중이던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이날 저녁 도청 앞 금남로는 시위대와 계엄군의 공방전으로 지옥이 되었다. 공수부대원들은 개머리판으로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부수며 전진하였고, 닥치는대로 운전기사들을 끌어내 두들겨 팼다. 그러나 잠시 물러나던 시위대는 공용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온 또 다른 시위대와 합류하여 계엄군을 압박하였고, 계엄군 저지선은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까지 후퇴하였다. 7시 30분이 되면서 금남로에는 전체적인 형세로 보아 시위대가 계엄군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도청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혈전이 계속되었다.

이날 밤 광주지역의 시위대들은 시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았으며, 밤이 깊어갈수록 쌍방의 공방전은 고조되었다.

이윽고 MBC와 KBS방송국이 불타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수부대의 만행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정부의 발표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시민들이 방송국에 불을 지른 것이다.

시내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대가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다소 경험을 가진 몇몇 지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직 무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무기가 될만한 것들을 이용하여 계엄군에 저항하고 있었다.

밤 11시경 광주역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광주역을 지키고 있던 3공수여단과 시위대의 공방전이 격렬해지고 시위대가 차량을 앞세워 군의 저지선을 돌파하려하자 일제히 발포를 하였고 시위대의 맨 앞의 시민들이 총격에 의해 쓰러졌다. 또한 비슷한 시각에 광주세무서 앞과 조선대학교 부근에서도 발포가 있었다. 광주에서의 최초의 발포였다.

광주 시내의 항쟁이 확대·발전됨에 따라 계엄군은 시내 주요 거점만을 장악하고 있을 뿐 항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외로 통하는 교통과 통신을 차단하면서 광주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4. 5월 21일의 상황

가. 가자, 도청으로!

20일 자정이 지나 21일 새벽이 되어도 시민들의 항쟁은 그칠 줄 몰랐다. 새벽 1시에 시민들은 세무서로 몰려가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 국민들의 삶과 복지를 위하여 쓰라는 세금이 자신들을 죽이고 두들겨팬 군대와 무

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민들은 경찰서나 기타 공공건물을 오히려 보호하는 분위기였으므로 방송국과 세무서 방화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초기에 파출소를 공격했던 것과는 그 이유가 질적으로 달랐다.

항쟁 나흘째로 접어든 21일 아침, 지난 새벽 광주역에서 사망한 시민의 시체 2구가 시민들의 손에 들려왔다. 시민들은 손수레에 시체를 싣고 대형 태극기로 덮어 천천히 시내로 나아갔다.

시위대의 식사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준비하였다. 시장 주변에서는 쌀과 반찬을 모아 지나가는 시위대에게 제공하였으며, 그외에도 각종 음료수와 부식 등이 지나가는 시위대에게 전달되었다.

오전 10시경, 금남로를 메운 10만여명의 인파 속에는 쇠파이프나 몽둥이로 원시적인 무장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무렵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정부 당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광주사태 담화문' 을 발표했다. 그의 담화문은 '광주사태' 를 '불순분자 및 간첩들의 파괴·방화·선동' 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계엄군의 자위권을 강조함으로써 발포명령이 이미 내려졌음을 암시한 셈이다. 그날 오전 10시 10분경에는 벌써 도청광장에 있던 공수부대에 실탄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나. 도청앞의 집단발포

21일 아침부터 금남로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과 계엄군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대치하고 있었다. 오후 1시 정각, 도청 건물 옥상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애국가에 맞춰 일제히 요란한 총성이 터져 나왔다. 공수부대원들이 '엎드려 쏴' 자세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집단발포를 시작한 것이다. 전일빌딩, 상무관, 도청, 수협 전남도지부 건물 옥상에서 저격병들이 시위대열의 선두에 있는 시민들을 겨냥하여 사격을 실시했다. 사격은 메가폰으로 '사격중지 명령' 을 내릴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되었다. 이로써 광주시민들이 간절하게 품고 있던 소박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 기대' 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금남로는 피바다를 이루었다. 시민들로 가득찼던 거리는 적막에 빠졌고 죽은이들의 피와 부상자들의 신음만이 금남로를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태앞에 시민들은 넋을 잃고 분노와 공포감으로 치를 떨었다.

이 집단발포로 몇 명의 시민이 살상당했는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군의 발표와 1988년 이후 피해자 신고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이곳에서 최소한 54명 이상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날 도청앞 집단발포를 명령한 자는 누구인가? 광주특위 청문회에 불려나온 공수부대 지휘관들은 ① 시위대가 먼저 발포했다 ② 실탄은 31사단 병력이 제공한 것이다. ③ 상부로부터 발포명령은 없었으며 대대장급 이상의 현장 지휘관들도 발포명령을 하지 않았다. ④ 정당방위 차원에서 누군가가 먼저 발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항쟁 1년후 육군본부가 각 부대의 상황일지를 종합·검토하여 정리·편찬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에는 총과 실탄이 피탈당한 최초의 사례를 5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나주경찰서 삼포지서, 영광파출소, 금성파출소, 수안파출소의 예비군 무기 피탈, 오후 3시 50분경 화순경찰서 무기 피탈로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1988년 12월 21일 광주특위 제21차 청문회에서 1980년 당시 광주로 투입된 11공수여단장 최웅은 "예하 대대장들이 그전-도청앞 발포-부터 벌써 실탄을 달라고 했지만 절대 발포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1일 아침부터 우리는 윤흥정 사령관에게 강력하게 철수를 요구했다. …… 상황이 너무 급히 돌아가고 보니까 부하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하겠고,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병력을 빼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로 한단계 높여서 결심권자에게 요청을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윤흥정 사령관은 최웅 11공수여단장의 이런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21일 서울에 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발포여부를 묻는 급전을 받았다. 정호용은 '사태가 악화되자 발포여부를 묻는 급전이 날아와 나는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지만 절대 발포불가 명령을 내렸다' 고 1988년 5월의 월간 「경향」이태원 기자와의 「정호용, 광주사태 책

임자 밝히다」라는 인터뷰에서 그 내용을 말한 바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예부대인 공수부대의 지휘관들이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현지사령관 에게는 발포건의를 하지 않고 지휘계통에 있지도 않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발포여부를 묻는 급전을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도청앞 발포 명령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예로 아는 군인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부하들에게 발포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4·19당시 발포명령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형을 감수한 최인규를 떠올리게 한다. 발포명령 책임자를 밝히는 일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그간 신군부가 구체적인 핵심증거를 5공화국 8년동안 모두 없애버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다. 시민군 탄생과 공수부대 철수

시민들은 무장을 서둘렀다. 계엄군의 총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총이 필요했다. 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위대중 일부는 광주 근교의 화순, 나주, 영산포, 장성, 영광, 담양 등지로 달려갔다. 화순 탄광에서는 광부들의 도움으로 다량의 다이너마이트

와 뇌관이 확보되었고, 그외 각지역의 지서와 예비군 무기창고에서는 카빈 소총 등이 노획되었다. 노획된 무기들은 즉시 광주시내로 반입되어 청년들에게 분배되었다. 이들 무장시위대는 광주시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시민군' 으로 불렸고, 계엄군에 맞서 싸우는 '아군' 으로 간주되었다. 무장한 시민군은 주로 광주공원에 있는 시민회관을 본부로 삼았다.

시민군들은 계엄군의 정식 발포가 시작된지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경부터 응사를 시작하였다. 시가전은 도청을 중심으로 전남대 의대 근방, 노동청 근방, 공원 근방, 금남로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공수부대와 비조직적인 시민군이 전투를 벌임에 따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시민군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전투지도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들 지도부들은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10여명씩 조를 나누어 편성하였다. 이들은 각각 조별로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 시내 주요지점으로 배치되었다.

무장한 시민들이 도청으로 끊임없이 압박해 들어가자 계엄군은 오후 5시 30분 총퇴각이 결정되었다. 시민군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계엄군은 길 양옆으로 M60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계엄군은 도청 뒷담을 넘어 철수했으므로 철수한지 한참이 지나도록 시민군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저녁 8시경 시민군 일부가 총을 쏘면서 도청 안으로 뛰어들면서 드디어 시민군은 교도소를 제외한 광주시의 전지역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

이날의 총격전으로 광주 시내의 모든 병원들은 총상환자로 만원이었다. 버스나 소형차량들은 주로 부상자나 시체들을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의약품이나 일손도 태부족이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글자 그대로 신명을 다했다. 또한 병원 앞에는 시위 대열에 적극적으로 가담 하지 못한 가정주부, 아주머니, 아가씨들이 헌혈을 하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어린이까지도 팔을 걷고 달려왔다. 적십자병원 앞에는 인근 술집아가씨들이 '우리도 깨끗한 피를 가졌다' 고 절규하며 헌혈을 간청하고 있었다.

이날부터 전개된 새로운 사태의 하나는 항쟁이 더 이상 광주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으로 광범위하고도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광주 시내에 거주하던 미국인 약 200명은 미리 송정리로 빠져나가서 군용비행기를 이용하여 서울로 피신하였으며, 송정리 공군기지에 주둔해 있던 미공군은 그곳의 모든 비행기를 군산과 오산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5월 21일 계엄군 퇴각은 한편으로는 광주시민들의 투쟁의 결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군의 전술적인 작전이기도 했다. 계엄군은 이미 '광주지역의 봉쇄-내부교란-최종진압' 이라는 단계적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있었다.

한편, 시내의 모든 질서는 '시민군' 에 의해 자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5. 5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상황

가. 시민공동체 : 광주의 대동세상

항쟁 5일째 되는 날이 밝았다. 지난 저녁에 그토록 날뛰던 계엄군들이 물러나고 시민군들이 도청을 장악하자 시민들은 그러한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도청앞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광주시민의 계엄군에 대한 초기 저항은 수세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이었으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자기방어였으나, 실제로 그들의 항전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은 훨씬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모두 승리감을 만끽하며 높은 시민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동안의 혼란 속에서 길거리에 흩어져 있던 잔해들을 치워내고 시내를 깨끗이 청소하였다. 광주공원에는 지난 밤의 지역방어전투에 참가했던 '시민군' 들이 모여들어 시민군의 재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민군' 이 해야 할 일은 자체조직과 병력을 통제하며 계엄군의 반격에 대비하면서 시내의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아침 일찍 다시 도청을 접수한 '시민군' 은 우선 계엄군이 버리고 간 물건들로 어수선한 구내를 정돈한 다음, 도청을 본부로 정하고 1층 서무과를 작

전상황실로 사용했다.

상황실에서는 차량통행증과 시내 주유소의 유류를 보급받기 위한 유류보급증, 상황실 출입증 등을 발부하는 한편, 외곽지대에서 자체방위를 맡고 있던 시민군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타격대를 편성, 출동하기도 했다.

당시 계엄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외부에서 광주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 7개 지점을 차단, 봉쇄하고 있었으며, 시 외곽의 야산을 근거지로 매복하여 시민군이 통과하려 하면 사격을 가하였다.

나. 수습대책위원회 구성과 역할

한편 금남로와 도청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시민들은 도청앞에 모여 무엇인가 만족할만한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낮 12시 30분경 신부, 목사, 변호사, 교수, 정치인 등 20여명으로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오후 9시경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유지급 인사들의 「일반수습위」는 주로 계엄사 측과의 협상활동을 했으며 「학생수습위」는 실질적인 대민업무를 맡아보게 되었다.

학생수습위는 장례반, 홍보반, 차량통제반, 무기수거반으로 나누어 당일 계엄사에 요구한 7개항의 요구조건을 홍보하고 무질서하게 돌아 다니는 차량을 통제했으며 엉겁결에 총을 들었다가 버린 총이나 총을 놓고자 하는 사람들한테서 총을 받아 300여정을 수거했다.

두 수습위는 이날까지는 혼연일체가 되어 활동했으나 계엄사가 수습위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고 먼저 시민군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데서부터 두 수습위 모두 강온으로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시민수습위의 온건파(사실상 투항파)는 축출되고 학생수습위는 24일 저녁부터 강경파(투쟁파)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다. 5월 23일의 상황

시민들이 광주시 전역을 장악한지 이틀째인 23일, 시 외곽지역에서는 간헐적으로 총성이 들려왔지만, 아직 시내는 승리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이날도 자발적으로 길거리를 청소했으며, 시장 주변 길가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길가에 솥을 걸고 밥을 지었으며, 밤 새워 경계근무를 하던 시민군들에게 앞다투어 식사를 제공했다.

이날부터는 상가들도 띄엄띄엄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경 모여든 시민들로 도청 앞 광장은 거의 5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다.

도청 앞 광장 맞은편 상무관에는 시체를 담은 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관이 부족하여 아직 입관하지 못한 시체들은 무명천에 덮여 있었다. 입구에는 분향대가 설치되어 향이 피워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줄을 지어 분향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 밤에 구성된 학생 수습대책위원회는 일반시민 수습대책위원들이 모두 귀가한 상태에서 밤을 새워 대민질서, 홍보, 장례, 무기회수 문제 등을 토의했다. 이들은 다른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무기반납 문제에서는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무기를 일부 반납하여 그것을 조건으로 시민요구 사항을 협상하자는 문제를 놓고 두 세력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라. 수습위의 내부갈등,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수습대책위원회 내부에서의 갈등, 시민군과 수습대책위원회의 갈등, 이렇게 상이한 의견들이 끝내 화해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은 항쟁 6일째인 5월 24일이었다. 오후 1시경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학생수습위' 에서는 김종배, 허규정 등의 강경한 주장이 관철되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결의되었다.

첫째, 금번 광주사태에 대하여 일부 불순분자들과 폭도들의 난동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의 광주항쟁은 전시민의 의지였으므로 폭도로 규정한 점을 해명, 사과하라.

둘째, 이번 사태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시민장으로 하라.

세째, 5 · 18 사태로 구속된 학생 · 시민 전원을 석방하라.

네째, 금번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

이로써 학생수습위는 강경파(투쟁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온건파(협상파)가 한걸음 물러섰으며 무기를 무조건 반납하자는 시민수습위의

온건파(투항파)는 이미 전날 축출을 당했다. 당시 시민수습위에는 시민들의 신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인사들이 끼여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종잡을 수 없었다. 이들의 형태를 바탕으로 학생수습위의 온건파까지 무조건 투항하자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분류라고 볼 수 있다. 학생수습위의 위원장이던 김창길(전남대 농대 4년)은 당시 전남·북계엄분소 김기석 부소장의 양식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협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다. 김창길은 시민수습위원들과 동행하여 학생대표로서 김기석 부소장과 담판한 적이 있으며 김부소장의 고뇌에 찬 태도에 신뢰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날도 각국 외신기자들의 취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시민들은 사실보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기자들의 취재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보도를 하는 외신기자들에게는 협조해주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국내기자의 도청 출입은 상당한 통제를 받았지만, 외신기자들의 취재영역은 훨씬 자유스럽게 개방되었다.

23일 이후 광주 시내는 수습대책위원회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었고 계엄사 정보요원들이 잠입하여 교란작전을 편 관계로 커다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아침 8시에는 독침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도청 안에 간첩이 침투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후일 이 사건은 정보당국의 교란작전이었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 광주시민의 질서회복과 공동체 실현

그러나 '수습위' 내에서의 갈등이 커져가는 것과는 달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질서를 회복해 가고 있었다. 시장과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사

회복지단체에 대한 식량 공급이나 전기, 수도 등은 관련공무원들의 지원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결되고 있었다. 병원들은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 많은 부상자들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의 헌혈로 혈액원마다 피가 남아돌 지경이었다.

치안유지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신용금고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은방 등 일반 상점에서도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범죄율이 오히려 평상시보다 훨씬 낮았다. '수습위' 나 시민군들에게 필요한 자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해결되었으며, 300~400여명에 이르는 시민군과 항쟁지도부의 식사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어다 준 밥으로 해결되었다. 그 수는 줄었지만 시민군도 지도부의 의견대립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도덕성과 자치능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25일에 이르자 '수습위' 의 온건파는 그날 밤 모두 도청을 빠져나가고 저녁 10시 드디어 최후까지 투쟁하기를 결의한 항쟁지도부가 탄생하였다. 새로운 지도부는 학생수습위의 일부 투쟁파와 청년운동권, 그리고 그동안의 무장투쟁 국면에서 전면으로 부상한 기층민중 출신으

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지도부는 무기반납을 중단하고 투쟁의 조직적 지도를 위하여 역할을 분담했으며, 도청 내부의 행정체계를 잡고 민중생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고 했다. 그들의 전략은 '일면투쟁, 일면협상' 이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자위대를 편성할 계획을 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군이 총공격해 오면 도청 무기고에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하겠다는 위협적인 협상조건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까지 그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이 제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모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항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현실적인 전망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들에게 그만한 역량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6. 신군부의 광주 무력진압, '상무충정작전'

가. 죽음의 행진

5월 26일 새벽 5시, 농성동에서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민군이 탈취했던 계엄군의 무전기를 통해 도청 상황실에 보고되었다. 전 시민군에 비상령이 하달되었으며, 일반 수습위원들 중 이성학 장로, 김성룡 신부 등 수습위원들중 일부는 농성동으로 달려가 도로위에 드러눕기도 했다. 계엄군의 탱크는 시민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깔아뭉개 버리고 1km쯤 밀고 들어와 한국전력 앞길에 진을 쳤다.

26일 밤 도청 안에서는 계엄군의 진입이 임박한 것을 예상하고 일부 사람

들이 도청을 빠져 나갔다. 항쟁지도부도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만류하지 않았다. 지도부는 이미 궐기대회에서 사회자를 통해 최후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남아달라는 말을 전한 바 있었다.

이렇게 해서 YMCA에 모여 도청 항쟁지도부에 합류한 사람들이 150여 명이 되었다. 이중 80여 명은 총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60여 명은 고등학생 및 군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었으며, 여학생도 10여 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나. 상무충정작전

군의 자료에 의하면 충정작전은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5. 17. 이전)는 경찰력에 의한 데모 진압작전, 2단계(5. 18. ~ 5. 21.)는 계엄군에 의한 데모 해산 및 진압작전, 3단계(5. 22. ~ 5. 23.)는 도로차단 및 광주 봉쇄작전, 4단계(5. 24. ~ 5. 26.)는 선무활동 및 상무충정작전 준비, 5단계(5. 27)는 상무충정작전의 실시로 진행되었다.

5월 21일 상오의 대책회의에서 공수부대를 외곽으로 재배치하고 "5월 23일 이후 폭도소탕작전 실시"를 결정한 신군부는 광주 시민의 저항을 최종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채비를 서둘렀고, 충정작전 5단계인 '상무충정작전'을 통해 광주시민의 저항을 말살하기로 결정한다. 특히 '상무충정작전'에서 도청진압작전에 3공수여단 11대대의 1개 지역대를 특공대로 투입하기

3공수여단 특공조 휴대장비

M16	수류탄	방탄조끼	깨스탄	스턴 수류탄	특수 화학탄	오성 신호탄
80정 정당 140발	중대당 3발	개인당 1착	중대당 2발 (방독면)	전체 10발	전체 10발	중대당 1발

※ 자료출처 : 평화민주당 광주민중항쟁 백서, 156쪽에서 인용

7. 5월 27일 도청, 새벽의 마지막 불꽃

가. 도청진압작전

공수부대의 특공조는 26일 오후 6시에 도청의 항쟁지도부를 '소탕' 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완료했다. 이들은 밤 11시경 이동을 시작, 27일 새벽 1시 30분을 전후하여 조선대 뒷산에 집결, 작전계획을 최종 점검한 후 3시와 3시 30분경에 각기 도청, YWCA, 전일빌딩, 관광호텔 등 목표지점을 향해 은밀히 침투해 들어갔다.

5월 27일 도청진압작전 부대 및 결과

부 대		병력(장교/사병)	목 표	행동개시	점령완료
특공부대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14/66 33/224 4/33	도청 광주공원 전일빌딩 YWCA 관광호텔	01:00 01:10 01:00	05:00 05:06 04:40
	계	53/323			
공격부대	20사단 31사단	252/4,035 56/693	광주시 일원	02:20 04:00	05:00 05:00
	계	308/4,728			
봉쇄부대	보병학교 포병학교 기갑학교	24/548 36/620 19/1,522	외곽선 외곽선 외곽선	04:50 03:40 04:48	05:30 05:25 05:25
	계	79/2,690			

※ 자료출처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1990, 돌베개, 305쪽에서 인용

나. 시민군의 마지막 항전

도청을 기습타격할 임무를 맡은 3공수여단(여단장 최세창 준장) 11대대(대대장 임수원 중령) 제1지역대(지역대장 편종식 대위)는 M16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을 하였다. 3공수는 물론, 7, 11공수여단 병력까지 얼룩무늬 제복대신 일반보병 전투복을 입고 방탄조끼를 착용했다. 20사단 역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작전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도청진압 특공조는 조선대학교 뒷산에서 작전계획을 최종 점검한 뒤 각기 목표지점을 향해 은밀히 침투해 들어갔고 다른 공수부대의 지역대들도 시내 주요지점을 향해 골목길을 타고 침투하기 시작했다. 또한 광주시 외곽에 봉쇄선을 펴고 있던 20사단은 새벽 3시 30분까지 사단의 전병력이 중심가를 포위한 공격개시선으로 이동하여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항쟁지도부는 26일 밤, 죽음을 불사하고 남아서 싸우기로 한 시민들과 기존의 시민군들을 모아 전투조를 편성하였고 궐기대회가 끝난 후 YMCA에 남은 150여명을 기존의 시민군들과 섞어 도청을 중심으로 YMCA, YWCA, 계림초등학교, 전일빌딩 등의 주요지점에 배치했다.

계엄군은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광주시와 전남 일원 사이의 전화를 두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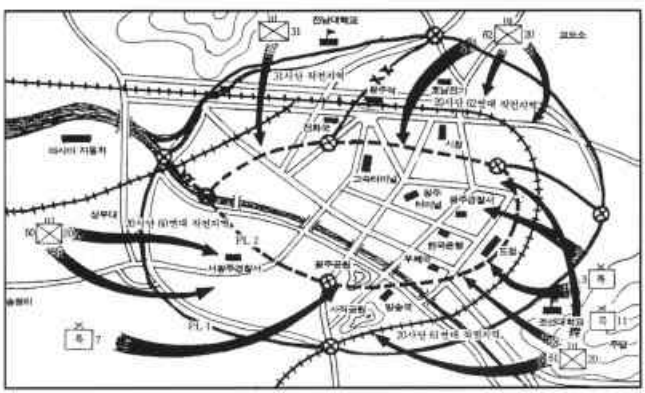
시켰고 곧이어 시내전화선도 모두 차단해버렸다. 전화가 끊어지기 전 시민들의 제보로 계엄군의 진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항쟁지도부는 도청에 비상령을 내렸고 조용히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홍보부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영순과 이경희가 홍보차량에 올라 새벽 3시까지 광주시내 전지역을 돌면서 목이 터져라 가두방송을 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요……." 그녀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은 그 후 오랫동안 광주시민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된다.

상황실에는 시시각각 계엄군의 진입현황이 보고되어 들어오고 있었다.

5월 27일 도청진압작전시 부대이동 상황



※ 자료출처 : 정상용외, 광주민중항쟁, 1990, 돌베개, 308쪽에서 인용

새벽 4시가 지나면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청의 시민군은 도청 전면과 측면에 2~3명씩 1개조로 담장을 따라 배치되었고 도청 안에는 1층부터 3층까지 유리창 옆에서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여단 특공조는 4개조로 나뉘어 도청을 포위했다. 도청 뒷담을 뛰어넘어온 특공조가 맹렬히 총을 쏘아대자 곧이어 사방에서 총탄이 쏟아졌다. 특공조는 도청 내부로 돌격하여 각 방의 문을 걷어차면서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았고 도청은 삽시간에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총소리와 비명이 난무한 가운데 인기척이 나는 곳에 무조건 총격을 가했다. 그야말로 '폭도소탕작전', 바로 그것이었다.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오전 5시 10분경 YMCA, YWCA, 계림초등학교, 전일빌딩, 관광호텔 등이 이미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당했고 도청을 마지막으로 최후의 항전은 끝났다. 완전히 소탕했음을 확인한 3공수 특공조는 20사단에게 도청을 인계한 후 광주비행장으로 돌아갔다.

항쟁의 피로 물든 아침이 밝아 왔다. 생존자는 '총기 소지자' '특수폭도' 등으로 분류되어 군부대로 이송되었다. 계엄군은 작전을 개시한지 약 1시간 30분만에 모든 것을 마무리짓고 항쟁을 진압하였다. 이로써 1980년 5월 광주민중의 무장투쟁도 열흘간에 걸친 역사의 막을 내렸다.

8. 항쟁의 확산

5월 21일의 도청 앞 집단 발포를 계기로 항쟁은 광주시내를 벗어나 전남 일원으로 순식간에 번져 나갔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항쟁의 불길이 광주 이

외의 지역인 화순, 나주, 함평, 영암, 강진, 무안, 해남, 목포 등지로 번져간 것이다. 21일 오전, 아시아자동차공장과 각종 차고에서 차량이 시위군중에게 대거 획득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는 광주시내에만 국한되어 고립적으로 진행되었던 5·18민주화운동이 전남도내 각 지방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것이다. 최초 시위대는 보다 전국적인 항쟁의 확산을 목적으로 전주 · 서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 전남 이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계엄군이 호남고속도로와 철도를 철저히 봉쇄한 결과 항쟁은 주로 전남 도내 서남부에 있는 각 시, 군으로 확산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항쟁이 발발한 지역이 주로 광주 남쪽의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전남지역과 다른 여타 지역을 분리하여 전남을 고립시키려는 신군부와 계엄군의 전략 · 전술에도 원인이 있지만 전남에서 항쟁이 발발한 대부분의 지역이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간 시위대에 동조하여 항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또한 전남일원의 경찰력 대부분이 광주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근 도시의 경비가 취약했다. 각 지역의 민중들은 그 전에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하여 처참한 학살이 자행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감정적인 분노에 머무르다가 광주에서 온 시위대에 의하여 그 분노가 실천적인 저항으로 폭발한 것이다.

9. 5·18민주화운동과 미국

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입장

5월 22일 미 국방성 대변인 토머스 로스는 "존 위컴 주한 유엔군 및 한·미연합사령관은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며 "지금까지 북한군이 한국의 현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움직임이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80년 5월 22일 강인섭 워싱턴 특파원 보도)

또 이날 미 국무성 대변인 호딩 카터는 광주사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광주의 소요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태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제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사태수습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불안상태가 계속되어 폭력사태가 가열된다면 외부세력이 위험한 오판을 할 위험성이 있다. 미국정부는 현재의 한국사태를 이용하려는 어떠한 외부의 기도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의무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동아일보, 1980년 5월 22일 보도)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PRC)는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 2대와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중인 코럴시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한다.

나.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이양

이같은 미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하고, 미국은 과연 신군부의 광주무력진압에 어떤 입장과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1980년 5월 16일의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서 파악 할 수 있다.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은 존.A.위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연합사령관은 요청전문을 접수했음을 확인한 후 "귀하의 요청을 승인한다(Your request is approved)"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군부가 20일에는 20사단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광주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광주로 보내도 되겠느냐'며 연합사에 '부대이동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 이에 위컴은 '워싱턴에 있는 상관들과 협의한 후 동의(agreed)'한 것이다.

또한 미 행정부는 한미연합사가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33사단 1개 대대의 작전통제권을 해제해 준 사례가 있다.

5월 23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확대에 대비, 광주지역 질서유지를 위해 5월 23일 12:00부로 33사단 1개 대대의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는 부대사용 협조문"을 보냈다. (육군본부, 육군참고자료지-작전명령 및 지시의 육본 작상전 제0-232호 인용) 그러자 연합사령관은 즉각 "승인"한다는 전문을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33사단 101연대 제2대대는 23일 12시 25분에 성남비행장에서 광주투입작전 대기상태에 들어갔으나 실제 광주에는 투입되지는 않았다.

미국행정부가 남침의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광주사태가 더 격화될 경

우 남침할 수도 있다'는 식의 경고를 계속한 것은 일반 국민이 5·18민주화운동을 불안하게 생각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광주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력진압을 정당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국은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를 직·간접으로 지원·옹호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Ⅴ.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1. 5·18민주화운동의 부활

광주의 거리는 평정을 회복했으나 그것으로 항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최초로 보여준 것은 항쟁의 와중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 의해서였다. 이들은 항쟁 이듬해에 「5·18의거 유가족회」를 발족시키면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당국에 대한 유가족들의 건의 및 요구창구를 일원화' 하기로 결의했다. 이어서 1982년 6월 13일에는 항쟁 때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1차 발기인 모임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해 8월 1일에는 광주 무진교회에서 18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5·18부상자 무등산 친목회」 (후에 '5·18광주의거 부상자회' 로 개칭)를 발족시켰다.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여러 개의 「5·18유관단체」가 발족되었다. 이들은 1980년 이후 해마다 5월이 되면 그날의 항쟁을 되새기는 행사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으로 떠올랐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하려는 시민·학생들의 몸부림도 그치지 않았다. 최초의 저항은 항쟁이 진압된지 3일째인 5월 30일 서강대 학생 김의기가 광주사태의 진상을 고발하는 글을 뿌리면서 서울기독교 회관에서 투신한 사건이었다. 이후 광주사태의 진상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전국 도처에서 계속되었다. 또한 항쟁 당시 신군부를 직·간접으로 도와주었던 미국에 대한 저항은 1980년 12월에 일어난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그 첫 봉화가 올랐다. 이후 반미운동은 계속 확산되어 82년 3월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85년 5월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으로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하고 등장한 제5공화국의 폭압정치는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투쟁인 1987년 6월항쟁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결국 '6·29선언'을 통해 전국민의 민주화요구를 수용하기에 이른다. 1988년 13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상황속에서 '5공청산을 위한 5공비리 특위와 함께 광주청문회'가 개최되어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이 전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후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화투쟁과 노력에 의해 1980년 당시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헌정을 유린한 신군부세력이 문민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의한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성과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1980년 5월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거칠게 타오르던 5·18민주화운동의 불꽃은 27일 새벽 계엄군의 '충정작전'과 함께 사그라 들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씨마저 짓밟혀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 불씨는 혹독한 시절에도 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면서 그날 이후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길로 남아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었으며, 오욕의 역사가 아니라 긍지의 역사였다. 광주시민들의 자랑과 긍지는 단순한 향토애나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쟁기간을 가장 뜨겁게 살았던 시민들의 절실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권력의 탄압이나 각종 언론의 왜곡

선전에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체험한 '광주의 진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우선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싸웠다는 점이다.

당시의 상황에서 항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들은 한 두 명의 영웅적인 항쟁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그에 저항했으며, 결국은 승리 하였다. 당국에 의해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매도되면서도 광주시민들은 비인간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항쟁의 전 기간 동안 광주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위기를 가장 인간다운 삶의 협동정신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계엄군에 포위된 채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대중 매체와 군 정보요원을 통한 교란작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민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살았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피가 부족한 부상자에게는 피를 나누어 주었으며, 일손이 필요할 때는 시민들 누구나가 달려들어 그 일을 해주었다. 항쟁지도부가

수습의 방법을 두고 고심할 때 일반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이다.

세번째로 광주시에서 계엄군이 퇴각하고 시민군이 시내를 장악한 이후 다시 계엄군이 진주할 때까지 6일 동안 광주의 시민들은, 특히 이 지역의 민중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이다.

그 기간 동안 광주시는 공식적인 치안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무정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치안체계를 유지하였다. 그토록 많은 총기류가 시민들의 수중에 있었지만, 그로 인한 불상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등 평소 범죄자들이 노릴만한 곳에서도 이 기간중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광주시민들은 성숙한 민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견지하였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오로지 민주주의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시민봉기였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은 곳은 그들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곳이거나 사실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방송국과 같은 보도매체들이었다.

그러나 시민군과 계엄군의 싸움은 정당성과 도덕성이 아니라 물리력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외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식 개인화기만으로 무장한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군이, 온갖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조직화된 계엄군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시민군은 항쟁기간 쌓아왔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며 패배하였다. 그러나 전투에서 승리한 계엄군도 광주시민들 마음속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잡은 자랑스러움과 긍지만은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 다시 우리들 주변에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지방에서 일어난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운 군부의 진압작전으로 일단은 좌절되었지만 그것은 실패한 역사로 기억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과거로서 오늘의 우리에게 그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1980년에 이르기까지 극소수의 사회운동 진영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혈맹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신군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러한 인식은 급속하게 깨져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반미운동의 고양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일반민주주의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나아가 1980년 봄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들어선 제5공화국은 자신의 허약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일관하였다. 그때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아진 것은 이른바 '5월투쟁'이었다. 1980년 이후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에서,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도시에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억압적인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국민들의 단합된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던 독재체제가 어느 정도 불식되었으며, 정부도 체제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양보를 하여 미진한 수준에서나마 일반 민주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종 지배구조에 억눌려있던 일반 시민들에게 주인의

식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현대사의 흐름을 뒤바꾼 전대미문의 시민무장봉기였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시민의 선혈을 발판으로 권좌를 차지했다. 그러나 2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5, 6공화국의 집권층이 보여준 광주양민학살만행과 천문학적인 부정부패가 온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역사와 정의와 법'에 의한 단죄의 행로를 걸었다.

그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신군부가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던 5공화국 7년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밝혀 줄 각종 군 자료와 증거들은 소리없이 사라져 갔다. 그러나 6공화국의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열렸던 광주특위 청문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상당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은 청문회를 거듭하면서 신군부 등 기득권자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과 책임자 규명 문제에 있어서는 교묘한 호도책으로 일관하여 완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민정부의 초기에는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단죄보다는 역사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이 나라의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을 살육한 부도덕한 신군부 집단'에 대한 전국민적 처벌 요구가 자칫 영원한 역사적 과제로 미루어질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거세지는 "5·18민주화운동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검찰은 다시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그들은 '역사에 의한 단죄'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저항권을 말살한 헌정 초유의 내란집단'으로 규정되어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에 전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세기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진상

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도 과거의 역사적 잔재와 의식의 소유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려 해도 반드시 국민과 정의의 힘에 의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어제의 패배에서 벗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승리의 항쟁으로 거듭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사에 유래 없는 초이성적 · 초도덕적 투쟁으로,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 방안을 광주시민과 더불어 전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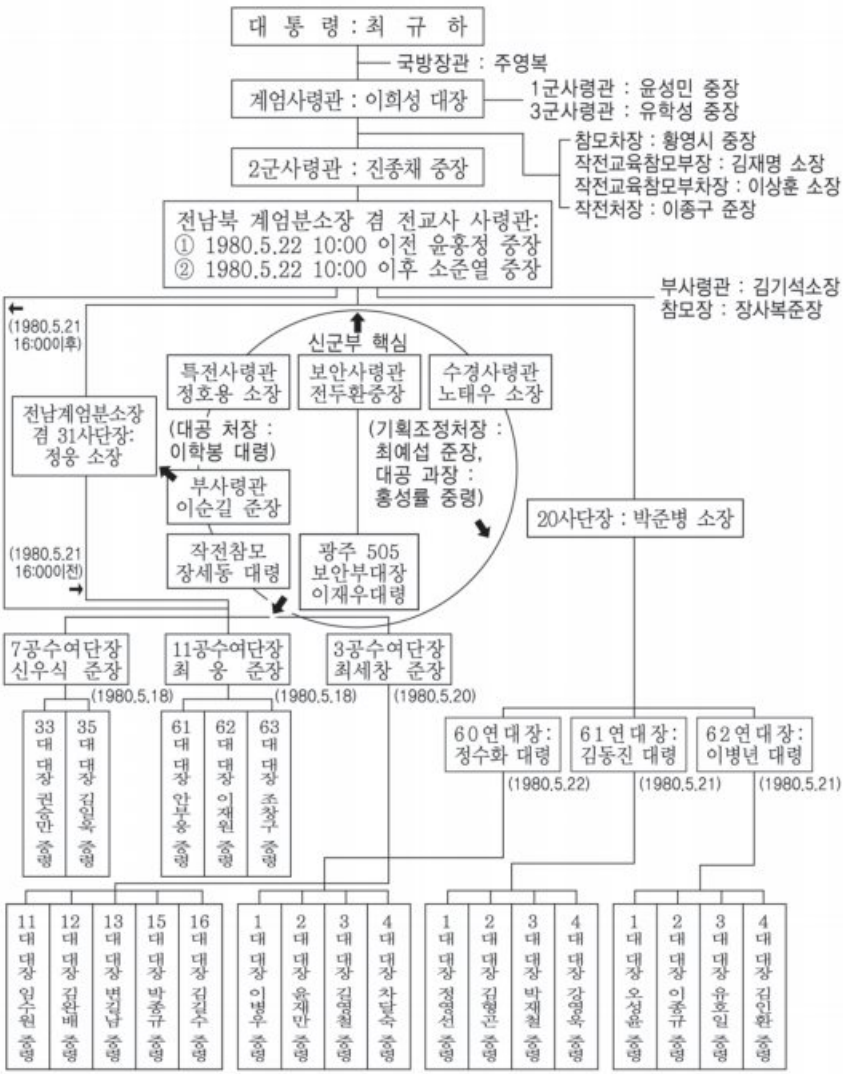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기약하기 위해서는 한 시대의 아픔과 절규에서 스스로 벗어나 우리 사회의 가능성과 역동성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의 실현이 요구된다. 서로 돕고 신뢰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현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더욱 더 찬란한 역사속의 빛으로 승화될 것이다.

5·18기념문화센터 사료편찬위원회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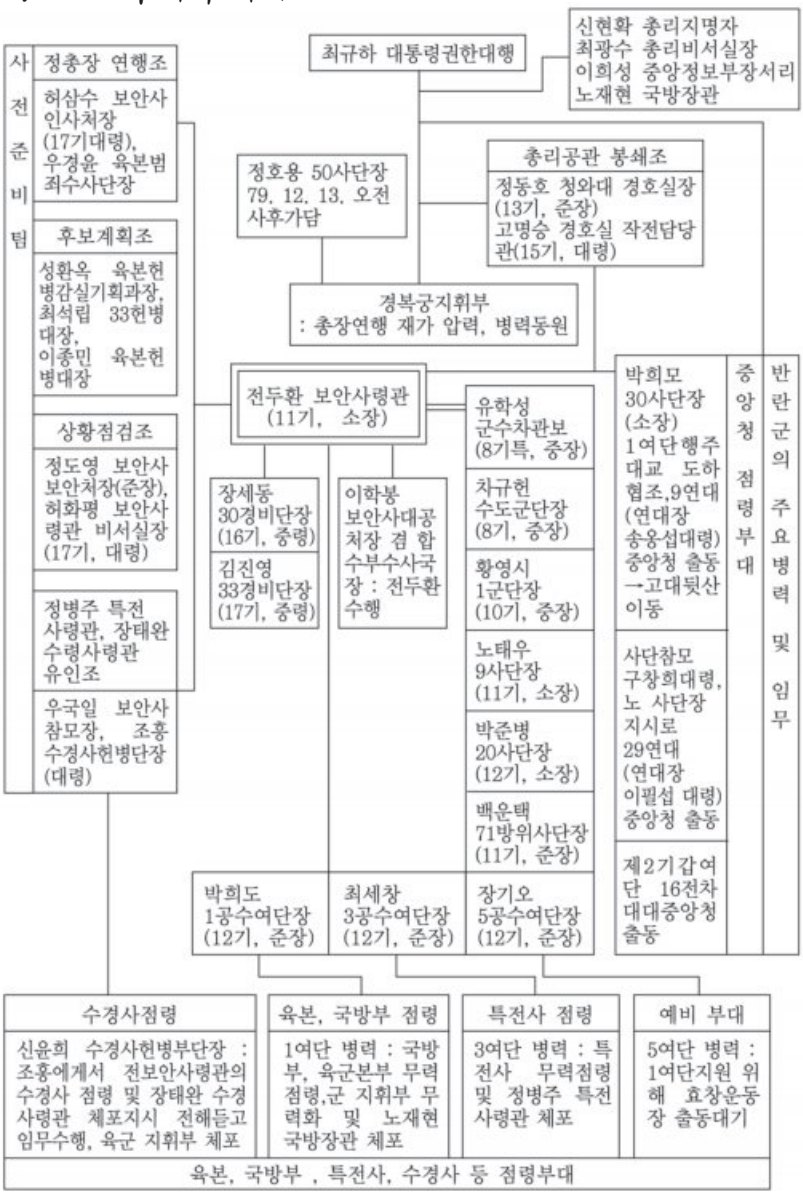
부 록

1. 광주진압군 지휘체계도



※ 자료출처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1990. 돌베개, 354쪽에서 인용

2. 12·12 쿠데타 체계도



※ 자료출처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1990. 돌베개, 355쪽에서 인용

3. 시간대별로 보는 10일간의 5·18민주화운동

5월 18일 (일요일, 맑음)

- 09시 40분 : 5월14일에서 16일까지 평화로운 민족민주화성회에서 광주 학생과 시민들은 비상계엄이 확대되면 도청 앞 분수대에서 모이자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기억한 전남대 학생들이 정문에서 광주에 진주한 7공수부대와 접전
- 10시 00분 : 학생들이 "계엄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
- 10시 15분 :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으로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 10시 20분 : "금남로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하기 시작
- 15시 40분 : 유동 3거리에 공수부대가 등장하면서 무자비한 진압작전 감행
- 19시 02분 : 계엄사령부, 광주지방 통행금지시간이 저녁 9시로 앞당겨졌다고 발표

5월 19일 (월요일, 오후부터 비)

- 03시 00분 : 증파된 11여단 병력, 광주역 도착
- 09시 30분 :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임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 10시 00분 :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 14시 40분 : 조선대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되어 무리한 진압작전 전개
- 15시 00분 : 시내 기관장 및 유지들, 회의를 갖고 시위 진압을 완화하도록

건의

- 16시 30분 : 계림파출소 근처에서 계엄군의 장갑차가 시위군중에 의해 포위되자 시민을 향해 발포, 첫 발포로 조대부고생 김영찬이 계엄군의 총에 의해 부상당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의 투쟁에 나섬
- 20시 00분 : 수 만 명의 시민들 "전두환 타도" 외침

5월 20일 (화요일, 오전에 약간의 비)

- 08시 00분 : 고등학교 휴교조치
- 10시 20분 : 카톨릭센터 앞에서 남녀 30여명을 속옷만 입혀진 채 심하게 구타당함. 공수부대와 시민 간의 공방전 계속
- 18시 40분 : 광주시내 곳곳에서 공수부대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겪은 운전기사들에 의해 무등경기장에서 금남로로 200여대의 택시가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차량시위를 벌이자 시위대 분위기 고조
- 20시 10분 : 시민들 도청을 향해 금남로, 충장로, 노동청 방면에서 공수부대, 경찰과 대치
- 21시 05분 :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 사망
- 21시 50분 : 계엄하에서 군부의 검열을 받던 언론이 과잉진압 행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시민들 거센 항의를 하며 광주MBC 건물방화
- 23시 00분 :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광주역 광장에서 무자비한 유혈진압에 항의하던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발포, 시민 2명 사망

5월 21일 (수요일, 맑음)

- 00시 35분 :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 02시 18분 : 시외전화 두절
- 04시 00분 :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시체 2구를 리어카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 이 소식을 들은 시민 수십만 명이 항쟁에 적극 동참함
- 04시 30분 : 광주KBS 건물 방화
- 08시 00분 :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20사단 병력과 충돌
- 10시 15분 : 실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 맨 앞으로 교체
- 10시 19분 : 광주세무서 건물 전소
- 11시 10분 : 대형헬기, 도청광장에 도착
- 12시 59분 :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몰고 온 장갑차 1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 13시 00분 :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 울려 퍼지면서 공수부대 사격 시작
- 13시 20분 : 청년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 14시 15분 : 도지사, 경찰헬기에서 시위해산 종용하는 설득 방송
- 14시 35분 :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트럭, 장갑차 수십대 획득
- 14시 40분 :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 15시 48분 : 공수부대원들이 주요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
- 16시 00분 : 화순, 나주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 16시 43분 :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기관총(LMG) 2대 설치
- 17시 30분 : 공수부대, 도청에서 조선대학교로 철수

5월 22일 (목요일, 맑음)

- 09시 00분 : 도청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 10시 30분 : 군용헬기 공중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 살포
- 11시 25분 :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 12시 00분 : 도청 옥상의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게양
- 13시 30분 : 시민수습위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분소 방문, 7개항의 수습안 전달
- 15시 08분 : 서울서 대학생 5백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
- 15시 58분 : 시체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 17시 18분 :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결과 보고
- 17시 40분 : 도청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 21시 30분 : 박충훈 신임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 (금요일, 맑고 한때 흐림)

- 08시 00분 : 학생들, 시민들 금남로 일대 등 자발적 청소에 나섬
- 10시 00분 : 시민 5만여 명이 도청광장에서 집회
- 10시 15분 : 학생수습위 자체 특공대 조직하여 총기 회수작업 시작
- 11시 45분 : 도청과 광장주변에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 13시 00분 : 지원동 주남마을 앞서 공수부대가 소형버스에 총격, 승객 18명 중 17명 사망, 단 1명만 생존. 이때 부상을 당한 2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가 살해함. 이곳에 묻혀있던 시신은 5·18 직후 주민의 신고로 발굴됨
- 15시 00분 :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이 시내 전역에 살포

- 19시 40분 :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 (토요일, 오후에 비)

- 13시 20분 : 공수부대, 원제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방광범군은 좌측머리에 총탄 관통되어 사망함.
- 14시 20분 : 송암동서 퇴각하던 공수부대와 잠복해있던 전교사부대간의 오인 총격전 발생, 이후 오인사격 화풀이로 인근 무고한 주민들을 다수 살상함
- 14시 50분 :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5월 25일 (일요일, 비)

- 11시 00분 :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와 구호대책비 1천만 원 전달
- 15시 00분 :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 17시 00분 :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용 신부의 4개항 수습안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 21시 10분 :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발생 예방과 식량공급 청소문제 등 논의

5월 26일 (월요일, 아침 한때 비)

- 05시 20분 :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 08시 00분 :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진입 저지를 위해 '죽음의 행진' 감행
- 10시 00분 :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 14시 00분 :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 15시 00분 :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 17시 00분 :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윤상원, 외신기자들에게 광주상황 브리핑
- 19시 10분 :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을 귀가조치 시킴
- 24시 00분 : 시내전화 일제히 두절

5월 27일 (화요일, 맑음)

- 03시 00분 :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
- 04시 00분 :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 04시 10분 :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들에게 사격
- 05시 10분 : 계엄군, 도청을 비롯한 시내전역 장악하고 진압작전 종료
- 06시 00분 :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선무 방송
- 07시 00분 : 3공수, 7공수, 11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 도청 인계
- 08시 50분 : 시내전화 통화 재개

4. 계속되는 5·18의 약사
(1979. 2. 5 ~ 2004. 5. 18)

1979년

- 2. 5: 광주 YMCA 강당서 김지하·송기숙 ·문익환·양성우씨 구속 문인의 밤 개최
- 3. 1: 윤보선 · 함석헌 · 김대중씨 등 재야인사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결성
- 6. 1: 김대중씨 자택서 외부연락 일체 차단된 채 연금상태 계속
- 6. 15: 광주교도소 수감중인 성래운 교수, 고영근 목사 등 48명 단식 투쟁
- 8. 11: 경찰, 신민당사서 농성중인 170여 YH무역여공 강제해산, 여공 김경숙 사망
- 8. 20: 천주교정평 · 김수환 추기경 유신철폐, 독재타도 외치며 서울시경까지 시위행진
- 9. 4: 대구 경북대 · 영남대생들, 유신철폐 요구 선언문 낭독 후 학생 다수 구속
- 9. 20: 서울대생 1,000여명, 학원민주화선언 낭독한 뒤 기동경찰과 투석전
- 9. 26: 고려대, 이화여대 , 연대생 등 수천 명 유신철폐 외치며 데모
- 10. 4: 국회, 신민당의원 따돌리고 본회의장 아닌 146호실서 민주공화당 의원(159명)들만으로 김영삼총재 징계 전격처리, 30년 의정 사상 최초의 의원제명 사건발생
- 10. 16: 부마항쟁 시작, 부산대생 5,000여 명 유신철폐 · 독재타도 외치며 시내진출
- 10. 18: 부산대 · 동아대생, 시민과 합세 대대적 시위, 정부 부산에 비상계엄령 선포. 마산에서 경남대 · 마산대등 계엄령반대 외치며 데모 공화당사 파괴

- 10. 26 :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격으로 박정희 대통령 피살, 전국 비상계엄령선포
- 12. 12 : 12 · 12쿠데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 강제연행 총격전

1980년

- 3. 29 : 조선대생 2천여 명, 학원민주화 위한 선언문 발표
- 4. 3 : 서울대생 제반 학내 자율활동 허용 요구하며 농성 돌입
- 4. 21 : 사북사태발생. 강원도 사북광업소 광부 7백 여명 경찰과 충돌
- 4. 24 : 서울지역 14개 대학교수 3백61명 학원사태관련 성명 발표
- 5. 4 : 국민연합 성명발표, 학원민주화와 계엄령 해제 요구
- 5. 14 :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가두시위를 결의
- 5. 15 : 서울시내 30개 대학 10만여명 밤늦게까지 서울역에서 시위
- 5. 16 : 전국 총학생회 회장단 정상수업받으며 시국관망 결정
- 5. 17 : 전국 55개대 학생대표 95명,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회의 중 연행
- 5. 18 : 비상계엄 전국에 확대, 정치활동중지공포하고 대학에 휴교령. 김영삼씨 가택연금하고 김종필, 김대중씨 등 26명 새벽에 연행
- 5. 18 : 광주민주화운동 시작, 전남대생 6백여명 교문서 7공수부대와 투석전
- 5. 19 : 11공수부대 투입, 강경진압에 항의 시 전역으로 시위확산
- 5. 20: 3공수부대와 20사단 투입,택시 200여대 금남로 차량시위
- 5. 21 : 공수부대 집단 발포로 최대의 희생자 발생, 시민군 도청접수
- 5. 22: 광주시위 목포, 나주, 화순, 해남 등 인접 시 군으로 확대
- 5. 23: 위컴 한미연합구사령관, 연합사소속병력 광주시위진압 동원에 동의
- 5. 24: '해방광주' 계속 연일 도청앞에서 시민궐기 대회 개최
- 5. 25: 시 외곽 물러난 계엄군 광주완전 봉쇄한 상황에서 양민학살

- 5. 26: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죽음의 행진' 후 상무대 계엄분소와 협상
- 5. 27: 2만여명의 계엄군 전남도청 등 유혈진압 광주전역 장악
- 5. 29: 5·18 관련사망자 망월동묘역에 매장(126명)
- 5. 30: 서강대생 김의기 서울 기독교회관5층에서 광주사태진상을 알리기 위해 "동포에게 드리는 글" 뿌리다 추락 사망
- 5. 31: 5·18광주의거 유족회 결성
- 5. 31: 이희성 계엄사령관 광주사태관련사망자수발표(사망자:170명: 민간인 144, 군인 22, 경찰 4)
- 6. 7: 성남 노동자 김종태씨 광주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광주시민,학생의넋을 위로하며"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대앞에서 분신자살
- 6. 7: 국회 국방위에서 윤성민 국방부장관의 '광주사태 전모' 발표(사망자 191, 부상 852, 연행구속자 2,522명–군법회의 회부 616, 훈방 1,906명)
- 6. 10: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광주사태에 대한 진상"발표 후 신부 8명 연행수감
- 7. 3: 계엄사 연행자 발표(훈방 1,146, 훈방예정 679, 계속조사 375)
- 7. 12: 계엄사, 카톨릭계 인사 7명을 광주사태 유언비어유포 혐의로 연행
- 7. 25: 이희성 계엄사령관 사망자 숫자 발표(사망자 189명: 민간인 162, 군인 23, 경찰 4)
- 7. 30: 광주사태에 관한 "찢어진 깃폭"이라는 유인물 및 녹음 테이프 제작 살포로 3명 구속
- 8. 16: 과도 정부로 정국을 운영하던 최규하 대통령 대리 사임
- 8. 21: 국방부전군주요지휘관회의 차기대통령에 전두환 위원장 추대결의
- 8. 27: 11대 대통령에 12 · 12사태, 5 · 17쿠데타 주도한 전두환 후보 당선
- 9. 17: 계엄보통군법회의, 김대중씨에게 내란음모 · 국가보안법적용 사형선고

- 9. 20 : 광주사태 구속자 가족회 결성
- 11. 14 : 동아 · 동양방송 KBS로 흡수통합. 지방일간지 강제통폐합
- 12. 9 : 광주미문화원 방화사건, 임종수 등 미국의 군부대 투입승인 항의 방화
- 12. 31 : 전남대 제적생 조봉훈 등이 광주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진상 보고서" 형식의 유인물 배포

1981년

- 1. 28 : 전두환 대통령 레이건 미대통령 초청으로 방미
- 1. 29 : 광주사태관련 구속자 가족 레이건 미국대통령에게 광주사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서한 보냄
- 2. 25 : 전두환 민정당후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

1982년

- 3. 18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발생, 문부식 등 반미 유인물 살포하고 방화
- 4. 8 : 최기식 신부 등 5명,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김현장씨 은닉혐의로 구속
- 4. 16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상임위원회(의장 · 김수환 추기경), '최 신부의 행위는 사제로서 최선의 길'이었다는 담화문 발표
- 5. 18 : 광주사태 2주년 합동위령제가 망월동에서 유족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 광주사태 구속자 가족 [5·18 2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정부의 광주의거 불온시 하는 것을 철회할 것, 진상규명, 미국의 광주사태 책임 등을 요구)
- 8. 1 : 5·18 부상자 동지회 발족
- 8. 10 :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 문부식, 김현장에 사형 선고
- 8. 15 : 광주사태 구속자 가족, [8 · 15를 맞이하여 광주사태 구속자 가족

들의 견해와 결의를 밝히는 글발표 (진상규명, 구속자석방,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등을 주장)

- 10. 12 : 5·18 당시 전남대학생회장 박관현 광주교도소에서 투옥 중 사망
- 10. 23 : 김대중씨 형집행정지로 석방, 미국 길에 오름

1983년

- 5. 18 : 김영삼씨, 무기한 단식에 들어감
- 9. 22 : 대구미문화원에 사제폭탄 투척
- 12. 21 : 학원사태 제적생 84년 1학기부터 복교 허용

1984년

- 3. 21 :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 발족
- 3. 24 : 서울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인정
- 4. 13 : 전국 55개 대학에서 학원민주화 등 요구하며 시위농성
- 4. 18 : 5·18광주의거 유족회장 전계량씨 한신대 개교기념일에 초청되어 광주의거의 진상을 폭로하는 강연
- 5. 18 : 민주화추진협의회 발족
- 10. 24 : 서울대 요청에 따라 경찰 6천4백 여명 서울대에 진입
- 11. 3 : 학생의 날, 11년 만에 부활 기념식 가짐
- 11. 3 : 42개 대학 대표 연세대서 '반독재민주화투쟁전국학생연합' 결성
- 11. 13 : 서울대생, 구로공단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

1985년

- 1. 7 : 함석헌 · 지학순 주교 · 김재준 목사 등 재야인사 22명 '재야간담회' 결성

- 2. 8 : 미국에서 신병치료 받아온 김대중씨 귀국, 환영인파 5만 명
- 2. 25 :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언론자유보장 위한 언론기본법 개정운동 전개
- 4. 17 : 전국 22개대 총학생회대표 26명, 고려대에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결성
- 4. 19 : 광주 공원 4 · 19기념탑에 참배하고 내려오던 유족 40여명을 가톨릭 센터 앞에서 정사복 경찰과 전경이 시비를 걸며 구타 후 수명 연행, 경찰국 기동대 연병장에 불법 감금 시킨 후 석방, 유족탄압 중지 촉구 유족회 성명서, 취업방해 구타 연행 규탄, 광주의거 진상규명, 책임자처단, 유족국가원호 대상자 책정, 유족 생존권 보장 요구
- 4. 19 : 전남대 5·18진상규명투쟁위원회 결성
- 5. 3 :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대 등 교내시위
- 5. 10 : 서울시내 15개 대학생6천명이 광주사태 진상보고회를 가진 뒤 광주사태 진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
- 5. 14 : 전국 25개 대학, 광주사태 진상규명등을 요구하며 시위
- 5. 15 : 전남청년협의회 주최로 YWCA에서 5월 그날이 다시오면 – 5·18 그 진상과 우리의 각오– 2차 만민 공동회 개최 저지 규탄대회 광주 고속앞에서 참가 희망자 200여명 집결 전남대 총학생회 산하에 "5·18진상 규명투쟁위원회"발족 (구호, "전제와 폭압을 격파하자 해방 광주여!"
- 5. 16 : 전국 39개 대학, 광주사태 관련 시위
- 5. 17 : 전국 80개 대학 3만8천 여명 대학생 광주사태진상규명 요구 격렬 시위
- 5. 18 : 야권, 광주사태 5주년 맞아 진상 밝히라고 촉구. YWCA 대강당에서 200여 시민 참가 5·18광주 의거 진상보고 및 강연회 주최

부상자회, 학생 50여명 광주 백화점 7층 점거시위, 학생 100여명 현대 예식장 앞 성조기 화형식 시위

- 5. 23 : 대학생 73명, 서울 미문화원 점령하고 광주사태에 대한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26일 자진 해산, 워커대사 한미관계 영향 없다고 성명
- 5. 29 : 5·18항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 황석영씨 연행
- 5. 30 : 신민당 김옥선 의원등 소속의원 1백 3명 전원의 이름으로 "광주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 6. 9 : 6월 7일 윤성민 국방부 장관의 광주사태 정부보고에 대한 항의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전남대 삼민투위원장 강기정(전기공 4)군과 한경(영교4)등 2명은 신민당 중앙당사에서 14일까지 농성
- 6. 12 : 성명서 6·7국방부 발표는 진상이 아니라 날조된 것이다, 5·18광주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표
- 6. 14 : 6월10일 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등을 요구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전남대생 2명 귀교, 경과보고 가진 후 경찰에 자진 출두 구속됨
- 6. 15 : NCC주최 6·25기념 예배 및 5·18진상보고회 행사 후 가두진출 시도 강제 해산
- 6. 16 : 광주 기독교 연합회 "우리는 분노한다, 광주시민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전 정권의 광주진상 왜곡을 접하며- 제작, 배포
- 6. 17 : 윤성민 국방장관의 광주사태 진상 발표에 대한 [범 광주시민 규탄대회]를 열려던 주최측 인사 20여명이 YMCA 3층 옥상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유인물 배포
- 8. 1 :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학인 401인 선언 발표
- 8. 15 : 노동자 홍기일씨 광주 YMCA 앞에서 유인물 뿌리며 분신 자살

• 10. 17 : 문익환씨 등 재야인사 60여명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문수사 및 용공조작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11. 21 : 서울 10개 대학생 2천 여명 독재종식과 제5공화국헌법철폐를 위한 범국민토론회
• 12. 2 : 전남대 5명, 전북대 5명 광주미문화원 기습점거, 수입개방 철회, 군부독재 지원중단 등 주장

1986년

• 2. 11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기독단체대표 KBS-TV시청료 거부운동본부 발족
• 3. 1 : 천주교 서울대교구 1백25개 성당서 정의와 평화를 간구하는 시국 기도회 시작
• 4. 7 : 대한변협 ,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구성하고 헌법개정 요구 성명 발표
• 4. 16 : 전남대교수 43명 '광주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는 조국의 현실에 우려를 표명' 한다는 시국선언문 발표
• 4. 28 : 서울대생 김세진 · 이재호군 '반전 반핵' 외치며 분신자살
• 5. 3 : 인천사태 발생. 학생, 근로자 등 5천 여명 경찰과 충돌 후 1백29명 구속
• 5. 8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목회자 민주쟁취선언' 성명발표
• 5. 9 : 조계종 승려 1백52명, 민주화와 관련 시국선언문 발표
• 5. 10 :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서울 · 광주 등 소속교사 5백46명 '교육 민주화선언' 발표
• 5. 14 : 호남지역 6개 대학생 2천명, 전남대서 반제반파쇼투쟁 호남지역 대학연합 결성
• 5. 16 : 천주교광주대교구 남동성당서 유족 2천명, 추모미사 후 금남로까지 가두시위

- 5. 17 : 전국주요대학, 5·18항쟁 6주년 광주민중항쟁계승과 희생자추모 집회 및 시위
- 5. 18 : 유족, 대학생들 1천명, 망월동묘지에서 광주사태희생자 제6주기 추모식 후 시위
- 5. 18 : 명동성당 청년신도 1천 여명, 광주학살진상규명대회와 추모미사 후 가두시위
- 5. 20 : 서울대 이동수군, 문익환목사 강연회 도중 '미제는 물러가라' 등 외치며 분신자살
- 5. 27 : 한신대, 국내대학 중 최초로 5·18항쟁희생자추모비 건립
- 5. 31 : 서울YMCA중등교육자회 등 4개 교육단체 초중등교사 3백50명 명동성당에서 교육자율화 결의
- 6. 6 : 강상철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화요구, 5·18 규명 요구하며 분신자살
- 6. 21 : 호남YMCA중등교사협의회 교사 2백29명 카톨릭센터에서 교육민주화실천대회
- 8. 12 : 분신 · 투신자살근로자 유가족 10여명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민가협) 발족
- 9. 7 : 대한 불교조계종승려 2천 여명, 해인사서 '불교악법철폐' 등을 결의하고 시위
- 10. 18 : 5·18광주의거 유가족 10여명은 23일가지 NCC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5·18광주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그 원흉인 전두환과 그 일당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진실규명하라"등을 주장하며 농성
- 10. 20 :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903호 광주사태 진상규명 농성
- 10. 28: 26개 대학 2천 여명 건국대서 '전국반외세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 후 농성

1987년

- 1. 14 :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발생. 서울대 박종철군 치안본부 대공 수사단에 연행돼 조사중 물고문 등으로 숨짐
- 2. 7 : 경찰, 박종철군 추도식 원천봉쇄 서울 · 부산 ·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산발시위 7백99명 연행
- 4. 10 : 정치인 김대중씨 가택연금
- 4. 13 : 전두환 대통령 이른바 '4 · 13호헌조치' 특별담화로 직선제 차단 내용으로 개헌논의유보, 현행헌법으로 정부이양, 대통령선거 연내 실시 등을 발표
- 4. 14 : 김수환 추기경, 부활절메시지에서 4 · 13조치비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비난성명
- 4. 21 : 광주 신부 13명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단식기도에 돌입
- 4. 27 : 서울 신부 40여명 호헌철폐 단식기도, 전남목사 19명과 광주대교구 수녀 80여명 단식가세
- 4. 29 : 문학인 1백93명 개헌촉구성명 가톨릭신부 16명도 시국성명 발표
- 5. 17 : 5·18항쟁 7주년 추모제 망월동묘지, 전국 62개 대학 등에서 각각 거행
- 5. 20 :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민불련 등 90여명 5·18항쟁추모법회 도중 경찰의 광주원각사 난입에 항의하며 서울 개운사에서 농성
- 5. 23 : 박형규목사 · 송건호 · 성래운 교수 등 재야 1백34명, 서울기독교회관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6월10일 규탄대회 갖기로 결의
- 5. 27 : 민주당 · 신구교 · 재야단체등 발기인 2천1백91명,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4 · 13조치철회 및 직선제개헌 공동쟁취 선언
- 5. 27 : 서울대 총학생회, 박종철군사건진상조작규명 및 4 · 13담화 철폐를 위한 동맹휴업결의

- 5. 30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8개 여성단체, KBS-TV시청료거부범시민운동여성연합 결성
- 6. 10 : 6 · 10대회 개최(6월항쟁). 민주당과 국민운동본부주최, 박종철군 고문치사조작 ·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 전국 18개도시 가두시위 경찰, 국민대회원천봉쇄, 3천8백51명 연행
- 6. 11: 6 · 10시위대 중 3백50여명 명동성당서 계속 농성
- 6. 18 : 국민운동본부,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등 주요도시에서 최루탄 추방대회강행
- 6. 20 : 서울시내 51개 중고교사 1백5명 정치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성명
- 6. 22 : 전국 30개대 교수 70여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발족
- 6. 26 : 전국 37개 도시서 6 · 10항쟁 이후 최대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대행진' 이름으로 심야까지 시위 경찰 3천 4백67명 연행
- 6. 29 : 6 · 29선언 발표.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 직선제개헌, 김대중씨 사면복권 등. 8개항의 시국수습 특별선언 발표
- 7. 5 : 6월 9일 연세대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이한열군 사망
- 7. 9 : 정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18명과 광주사태 관련자 17명 등 시국사범 2,355명에 사면 복권(10일) 발표
- 7. 10 : 전두환대통령, 민정당 총재직 사퇴선언
- 7. 21 : 전국 28개대 교수 80여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총회
- 7. 22 : 개신교 지도자들, 광범위한 사면복권과 광주사태 해결노력 등 노태우 민정당 총재대행에게 촉구
- 8. 19 : 전국 95개대 3천5백 여명 충남대에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결성식
- 8. 22 : 거제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

• 10.12~15 : 「고박관현 열사 추모 및 5월학살 진상규명 청년학도 진군주간」
–진군주간 선포식
'5·18진상규명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광주대회, 15일까지
「고박관현 열사 추모 및 5월학살 진상규명 청년학도 진군 주간」

• 10. 14 : 전남대 총학생회, 유인물 「5·18진상규명 및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광주시민 참가결의문」제작, 배포

• 10. 15 : 전남대 운동장에서 "5·18진상규명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광주시민대회"(학생 2,500여명)

• 10. 27 : 직선제 개헌안 국민투표, 찬성 93.1%로 확정

• 10. 28 : 김대중고문, 대통령출마와 신당창당 선언

• 11. 18 : 서울시내 16개 대학 7백명 건국대서 학살원흉집권분쇄 학생투쟁연합실천대회

• 11. 28 : 국민운동본부가 광주 · 서울등 전국 19개지역에서 「광주학살 및 12 · 12쿠데타 진상규명시민대회」를 시도,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

• 12. 6 : 김대중 후보, 조선대 집회에서 「광주의거 진상규명과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유가족 및 부상자의 피해보상 등을 전제로 한 광주사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

• 12. 16 : 제13대 대통령선거 실시 (노태우 대통령 당선)

1988년

• 1. 11: 민주화합추진위원회 발족(민주발전, 국민화합, 사회발전등 3개 분과위 구성)

• 2. 5: 5·18광주민중혁명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범국민추진위, 합동진상조사 특별위 구성 요구 성명, 문교부가 직권 선임한 조선대 관선이사 8명 첫이사회를 열고 장형태 전 전남지사를 이사장으로 선출, 조선대학자치운영협의회가 결성

- 2. 6: 야당, 국회에 「광주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
- 2. 10: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평회」에서 「민화위」진상규명 반박(광주 제단체 '민화위' 반박 성명)
- 2. 23: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광주문제 치유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출
  - 광주사태 성격 재규정, 정부의 사과, 사상자의 재신고
  - 사상자 보상, 취업알선, 어린이대공원 관리권 이전
- 2. 25: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취임
- 4. 1: 노태우 정부의 광주사태 치유대책 발표
  - 광주사태 성격규정(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사망자 추가신고, 사상자 지원 재정충당 및 취업알선, 어린이대공원조성비 국고부담, 광주지역 민간협의기구서 보상사업 집행키로
- 4. 2: 5·18광주의거 유족회등 광주사태 관련 4개 단체는 정부의 광주사태 치유책발표와 관련, 성명을 발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허구적이며 기만적인 해소책에 불과하다라고 주장,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등 요구)
- 4. 5: 김대중씨 광주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광주의거 해결방안을 제시」(완전한 민주화 실현, 진상규명, 광주시민의 명예회복, 유가족 · 부상자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 차원의 처우등)
- 4. 7: 광주지역 지원대책협의회 구성
  - 위 원 장 : 광주직할시장
  - 위 원(7) : 전남대 총장, 지방법원장, 지검검사장, 시교육감, 지방노동청장, 광주시 부시장, 전라남도 부지사
- 4. 15: 광주시 전담실무기구 설치
  - 직제승인: 1988. 4. 11 1담당관, 1과, 3계, 15명
    (1990. 4. 20 1담당관, 2과, 6계, 31명으로 확대)

- 5. 9 : 82년 "5·18진상규명"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신영일씨 사망
- 5. 11 : 중앙지원대책협의회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 위 원(5): 부총리, 내무, 법무, 보사, 문공부장관
- 5. 12 : 김대중 평민당 총재, 광주사태와 관련 전두환 씨는 광주사태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처벌에는 정치적 배려가 고려될 수 있으나 진실을 밝히는 데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5. 15 : 서울대 조성만군 양심수 즉각 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명동성당서 할복 투신자살
- 5. 16 : '광주5·18민중혁명희생자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5·18진상조사,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 5. 18 :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식 및 5월 학살원흉처단과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궐기 대회" 광주 도청 앞 분수대에서 20만명 참석 개최(행사개최 후 전남대 심야 토론회 계속됨)
- 5. 19 : "학살원흉처단과 진상규명을 위한 궐기대회" 도청 분수대에서 거행
- 5. 21 : "5월학살 진상규명촉구대회" – 도청광장 시위
- 5. 27 : 「5월진상조사위」구성 광주의거 유족회등 3개 단체
- 5. 18~6. 30 : 광주사태관련 사상자 추가신고접수
  - 신고접수: 704명(사망자 10, 행불자 102, 부상자 581, 기타자 11)
  - 1988년 이전: 1,110명(사상자 163, 부상자 947)
- 5. 29 : 인권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식 발족
- 6. 10 : 6 · 10남북청년학생회담 경찰저지로 무산
- 6. 14 : 고려대 등 3개 대학생 1천2백명 임진각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염원제
- 6. 27 : 국회 광주진상조사특위 등 7개 특위 구성결의안 통과

- 8. 26 : 국회 광주진상조사특위, 최규하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보냄
- 9. 8 : 전남여수서 국교 교사 21명, 국민학교(초등학교) 최초로 교사협의회 창립
- 10. 25 :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 삼청교육대 진상규명을 위한 공정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 10. 27 :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 10 · 27법난8주년 맞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촉구성명
- 11. 17 : 농민 1만명 여의도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및 제값받기전국농민대회' 개최
- 11. 21 : '전교협'산하 초중고교사 등 1만 여명 여의도서 '민주교육법 쟁취 전국교사대회' 개최
- 11. 26 : 전국 41개 언론사노조, 전국언론노조연맹창립대회 초대위원장에 권영길씨 선출
- 11. 26 : 노태우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계획 발표
- 12. 6 : 국회 광주특위,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속개(신현확 전총리 계엄확대는 내각과 협의가 없었다고 증언)
- 12. 7 : 국회 광주특위,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윤흥정 당시 전남 · 북 계엄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정과 특전사 및 정사령관의 역할, 발포책임자 등에 관해 신문(정호용은 발포명령에 대해 절대 관여한 사실 없다고 부인)
- 12. 14 : 관계부처 참여 법안작성, 의원 입법키로 민자당 송부
- 12. 14 :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 진상 규명 없는 보상 거부한다고 성명
- 12. 20 : 5·18광주민중항쟁 유족회 등 4개 단체 회원 70여명, 광주청문회가 속개중인 국회의사당으로 난입, 진상규명 없이 보상만 전제로 한 특별법은 전면 부인한다고 소동

1989년

- 1. 16 : 5·18항쟁 당시 특전사 중사 최영신씨 양심선언서 발표
- 1. 18 : 전남대 50여명과 조선대 2백 여명, 광주미문화원과 광주지검 각각 기습, '노태우 처단' 을 외치며 시위
- 1. 21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협)출범
- 1. 26 :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불참의사를 밝힌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동행 명령장 집행
- 2. 14 : 광주 중앙교회 제 2차 광주 학살 진상규명 촉구 및 미문화원 철폐를 위한 범시민결의대회
- 2. 15 : 노태우 대통령 '광주문제 조기치유' 지시-광주직할시 순시시 광주문제, 조기치유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공감을 받는 대책 마련 지시
- 2. 23 : '전대협',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 공식 참가 발표
- 3. 1 : 전국농민운동연합 결성
- 3. 3 : 광주 민주화 운동관련 법안 국회 광주특위에 제출
- 3. 5 : 가톨릭센터 소회의실에서 월례모임"광주사태진상규명"요구
- 3. 17 : 광주YMCA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학살자 처벌을 위한 범시민 공청회
- 3. 25 : 문익환 목사 북한 방문 파문
- 5. 3 : 부산 동의대참사사건 발생, 전경 6명 사망 동의대에 휴교령
- 5. 10 :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사건 발생
- 5. 18 : 광주 · 전남지역 7개대 교수 8백54명,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촉구성명 발표
- 5. 2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위원장에 윤영규교사(전남체육고) 선출, 주도교사 26명은 대회 후 교원노조탄압중지, 연행교사석방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단식 농성
- 5. 19 : 정부, 민정당 5공청산을 위한 피해보상, 노대통령 특별담화, 핵심인사 처리, 전전대통령 국회증언 등 4단계 추진키로

- 6. 20 : 미 국무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국회청문회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전달
- 6. 21 : 영화감독 등 영화인 2백 여명, 대학로서 미UIP사 영화 직배 중단 요구 시위
- 6. 24 : 조선대생 4백 여명, 이철규씨 사인 진상규명 요구하며 광주지검 습격
- 6. 30 : 전대협 대표 임수경양 방북, 평양청년 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도착
- 7. 7 : 전대협대표 임수경양과 북한학생위원회 김창룡위원장, '남북청년학생 공동선언문' 발표
- 7. 19 : 진관스님 등 스님 30여명 동국대서 '불교탄압저지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지선 스님 등 구속불자 석방 요구
- 7. 20 : 광주시내 23개 고교생 1만5천 여명, 전남대와 대동고서 전교조 가입교사 징계에 항의 연합시위
- 7. 26 : 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임수경양과 판문점통과에 동행할 사제단 대표로 북한에 파견
- 7. 27 :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 판문점통과를 요구하며 북한지역 판문각서 단식 농성,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20명은 판문점으로 향하던 중 연행
- 8. 1 : 인도주의실천의사회 광주전남지회, 영광원전 인근 주민 역학조사 결과. 방사능 오염증세가 나타났다고 발표
- 8. 5 : 변형윤 교수 등 서울대교수 47명 '전교조' 탄압중지 촉구성명
- 8. 15 :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 판문점을 통해 귀환
- 8. 30 : KBS, MBC, CBS노조 '방송악법개폐추진위원회' 결성
- 9. 11 : 임시회의 소집- 5·18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없는 보상법 제정 반대, 공안정국 종식 민주인사 석방 등 요구 농성 계획 수립

• 10. 30 : 5월 운동협의회 회원 인솔, 국회의사당 및 여야 4개당사 방문–선진상규명 책임 자 처벌 요구
• 12. 23 : 국회, 광주특위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청취 (12. 30)와 5공특위와 광주특위에서 전두환 전대통령 증언을 청취키로 결정
• 12. 31 : 전두환 전대통령 국회 출석, 125개 항목에 걸친 서면 질문에 관해 답변

1990년

• 3. 6 : 국회 의사당내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사무실에서 광주사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자진 해산
• 5월 18일 ~ 27일 : 전야제에서 부활제까지 41개 단체 연합한 5월 행사 진행
• 7. 14 : 민자당 광주보상법 등 26개 안 기습통과
• 8. 6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 공포(법률 제4,266호)
• 8. 10 : 평민당, 민주당 국회에서 변칙 통과된 광주보상법 등 26개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공동제출
• 8. 17 : 동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13,075호)
• 8. 17~9. 15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사상자 추가신고 접수 –1차보상
– 신고접수 : 2,693명(사망자 190, 행불자 148, 상이자 2,290, 연행 · 구금자 65)

1991년

• 4. 26 : 명지대생 강경대 백골단에 의해 타살
• 5. 26 : 분신 사망한 전남대생 박승희 장례식에 학생, 시민 20여만 명 참여, 91년 5월투쟁으로 13명 사망(강경대,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박창수, 김기설, 윤용하, 이정순, 김철수, 정상순, 김귀정, 이진희, 석광수 등)

1992년

- 5. 19 : 김영삼 민자당대표 최고위원, 14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돼
- 5. 26 : 김대중 민주당공동대표,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돼

1993년

- 2. 25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문민의 정부 출발
- 3. 18 : '진상규명은 역사에 맡기자'고 말한 김영삼 대통령 망월동 참배 저지당함
- 3. : 5·18문제해결 5대 원칙(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집단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확정
- 5. 13 : 김영삼 대통령,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며 현정부는 그 연장선 위에 서있는 민주정부로서 그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
- 5. 29 : 동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3,898호)
- 6. 1~7.31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사망자 추가신고 접수 –2차보상
  - 신고접수 : 2,791명(사망자 15, 행불자 117, 상이자 1,483, 연행구금자 1,176)

1994년

- 5 · 18학살책임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운동 전개
- 8. 30 :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창립
- 10. 19 : 80년 김대중내란 음모사건과 관련 구금됐던 김상현의원 외 당사

자와 유족 22명, 전두환 · 노태우 등 신군부 관계자 10명 내란목적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로 검찰에 고소

1995년

- 4. 7: 서울지검, 5·18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피 고발인인 정호용의원을 소환조사
- 7. 13: 서울지검, 5·17내란죄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내림
- 7. 18 : 검찰 불기소 발표
- 7. 19 : 광주시민 3천 명 시위, 명동성당 농성 돌입
- 7. 20: 대한변호사회 특별검사 촉구, 광주변호사회 성명, 광주공원 3천 명 시민대회
- 7. 21 :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위, 대구 · 경북연합성명, 민가협 시위, 민변 위증협의 고발
- 7. 22: 서울(4천 명), 광주(5천 명), 구·대전·제주시위
- 7. 24: 5·18국토종단행진 출발, 김영진의원 농성,5 18고소, 고발인 헌법소원
- 7. 25: 천주교 인천 교구 정평위 성명, 경실련 5·18토론회, 5·18 고소 고발인 항고, 참여연대 5민련 특별법 입법 청원
- 7. 27: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국미사
- 7. 28: 5·18학살자 불기소규탄대회, 서울지역대학생 2천명 시위, 광주대교구사제단 기소촉구성명
- 7. 31: 고려대 교수 1백31명 성명(1987년 6월 이후 최초 교수성명)
- 7월 : 5·18학살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5·18유족과 부상자 등 150여명 명동성당 농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전두환, 이희성 등 7명을 국회위증죄로 고발

- 7. 24 : 정동년 5·18항쟁 고소인, 전두환 · 노태우 전 대통령 등 피고소인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출
- 8월 : 5·18학살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 8. 1: 5·18공대위 전남도청 앞 농성
- 8. 2: 광주 · 전남교수협의회 성명, 광주 · 대전지역대학생 시위
- 8. 3: 민족작가회의 6백명 규탄성명, 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제정추진발표
- 8. 4: 경북대 · 한신대 교수 서명
- 8. 5: 인하 · 경기 · 원광 · 조선대 교수 등 성명
- 8. 8: 전북 · 강원 · 상지 · 연세대 교수 등 성명
- 8. 9: 서강 · 동국 · 성공회대 교수 성명, 김수환 추기경 '광주학살진상 밝혀야', 한총련 대학생 대규모시위
- 8. 10 : 서울연합, 5민련 탑골공원 집회
- 8. 11: 광주 · 전남지역 10개 대,성균관 · 중앙 · 동아 · 부산 · 한남 · 경상 · 경남 · 창원대 등 19개대 교수 성명, 광주 전남지역 교수 50명 항의거리시위, 송광 · 화엄 · 백양 · 대둔사등 조계종 4대 본사산하 주지 성명
- 8. 14: 민교협 소속교수 1백50명 3일간 농성돌입,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광주 전남기자협회 성명
- 8. 16: 5·18국민위 · 공대위 장충단공원 대규모 국민대회
- 9. 6 : 언노련 · PD · 기자협회 5·18토론회,연세대 교수 1백13명, 배제대 교수 52명 성명, 아주대교수평의회 성명, 광주 전남 언론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단 성명
- 9. 7 : 한림대(77명), 대전대(64명) 교수 성명
- 9. 12: 5·18공대위 국회개원 기자회견, 남총련 4백명 민자당사 시위, 계명대 교수 2백74명 성명

- 9. 13: 남총련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24개 대), 26일까지 3백여명 참여, 경북대생 2백명시위, 민교협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탄핵소추 밟아줄 것을 국회에 촉구
- 9. 14: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교수 50명 성명, 숭실대 교수 84명 성명, 부산경성대 등 3개교 총학 성명, 경성대 3명 단식, 전북총련 3백명 시위
- 9. 15: 홍익대 교수 74명 성명
- 9. 16: 5·18국민위 여의도 3천명 시위
- 9. 17: 천주교 정평위 사제단 12만명 서명부 공개
- 9. 20: 연대 · 중대생 6백명 시위, 한총련 2백4개 대 동맹휴업 결의, 전대협동우회 등 전국 13개 청년단체 4일간 단식농성
- 9. 21: 서울시내 7개대 2천명 시위, 숙대(21명), 방통대(65명) 교수 성명
- 9. 22: 고·연대 등 6개대 2천명 시위, 국민의 입법청원서와 28만명 서명록 국회전달, 한신대 교수1백94명 성명, 광주 초중고 교사 3천1백8명 성명
- 9. 23: 대전·충남총련 6백명 시위, 영호남 청년학생 3천명 대회, 부산연합 등 부산20개 사회단체 5·18대책위구성, 23일까지 서명교수 45개대 6개교수 · 단체 5천1백83명(교육부 국감자료)
- 9. 25: 전북 1백51개 초중고교사 8백24명 선언문, 전북총련 50명 전북대서 삭발농성, 외대생 26명 단식농성, 한대생 5백명 화염병 시위,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학생 등 3개 단체 20명 6일간 금식기도, 성신여대 교수80명 성명
- 9. 26: 서명교수 91개 대 5천여명 모임결성 발표, 성대생 9명 5일간 단식농성, 한총련 298, 30일 동맹휴업 발표, 서울대 총학생회 14명 단식농성, 인하대교수 1백87명 성명, 천도 · 원불 등 전북종교지도자 선언문발표

- 9. 27 : 부산민주청년회 등 1천명 특별법제정 1천인 선언 발췌, 전교조 충북지부 등 11개 단체 5·18충북공대위 구성, 전북지역 13개 대 교수 1천4명 성명, 전국 12개 신학대학 총학생장단 성명
- 9. 29 : 전국 1백20여개 대학 5·18동맹휴업
- 9. 30 :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5차 국민대회,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서명교수 모임 정식출범, 부산 · 대구 등 전국 13개 도시 특별법제정과 특검제도입 촉구
- 10. 11 : 〈뉴스플러스〉 10.5일자, 경북고 동문회 모임에서 "광주사태는 중국 문화혁명에 비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발언한 사실을 보도 파문확산
- 10. 14 : 5·18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 전국대도시 5·18 범국민대회
- 10. 16 : 한총련 소속 대학생 13명 민자당사 점거농성
- 10. 18 : 민주당 박계동 의원 노태우 씨 비자금 4천억원 폭로
- 10. 21 : 법학교수 1백24명 5·18의견서 헌제 제출
- 10. 22 : 5·18특별법 6공 비리척결 범국민의 연계투쟁 선언
- 11. 3 :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 동맹휴업
- 11. 4 :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 6차 국민대회
- 11. 7 : 전국 노조1백개 대표자 회의 특별법 성명
- 11. 11 : 서울 등 전국6대 도시 제 7차 국민대회
- 11. 13 : 국회법사위 특별법안 심의
- 11. 24 : 김영삼 대통령 5·18특별법 제정 결단
- 11. 24 : 김영삼 대통령, 5·18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민자당에 지시
- 11. 26 : 서울지검, 12·12와 5·18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 11. 27 : 헌제 5·18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평의를 열어 검찰의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은 부당하다고 결정

- 11. 29: 민자당 5·18특별법과 관련 내란 군사반란 등 헌정파괴 범죄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조치법 마련키로
- 11. 30: 검찰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죄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 12. 2: 전두환 전대통령, 검찰의 12·12와 5·18 재수사와 관련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힘
- 12. 3: 검찰 소환을 거부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안양교도소 수감)
- 12. 5: 대검찰청,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재임중 재벌총수 등으로부터 모두 2천9백억 여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노씨를 구속기소
- 12. 12: 김영삼 대통령,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는 명예혁명이며, 군사문화청산과 쿠데타의 망령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
- 12. 16: 최규하 전대통령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성명서를 통해 검찰 조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국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밝힘
- 12. 17: 보상법 개정(법률 제5,463호)
- 12. 19: 국회, 12·12 및 5·18관련자 처벌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

1996년

- 1. 8: 서울지검, 전두환 전대통령이 백담사 이후 대비 100억원 대의 거액을 은닉해왔던 것으로 확인

- 1. 12 : 검찰,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결과 발표(전씨가 80년부터 88년 3월까지 대통령 재임중 기업인들로부터 7,000억원을 거뒀고, 새마을성금 1,495억원, 일해재단기금 598억원 등 각종 성금과 기금 2,515억원을 합하면 전씨가 재임중 거둬들인 자금총액은 9,5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히고, 그중 2,159억원은 뇌물로 밝혀내)
- 1. 17 : 서울지검, 유학성 · 황영시 · 장세동 · 이학봉 · 최세창 등 5명에 대해 12 ·12쿠데타와 내란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 1. 23 : 검찰, 5·18중간수사 발표 전두환 · 노태우 전직대통령을 내란 및 군사반란혐의로 추가기소
- 1. 30 : 서울지검, 5·18과 관련 정호용 · 허삼수 · 허화평 등 현역의원 등 3명에 내란죄 적용, 구속영장 청구
- 3. 11 :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12 ·12군사반란과 5·18내란사건 첫공판 개정, '세기의 재판' 시작
- 3. 18 : 12 ·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학살에 대한 2차공판(피고 전두환, 대통령 재가없이 정승화총장의 연행을 계획했다고 진술)
- 8. 5 : 12 ·12 및 5·18 특수부, 피고 전두환 · 노태우씨에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
- 10. 7 : 미 LA타임스, 미국은 80년 광주사태 당시 한 · 미 연합사소속 병력의 차출을 사전 승인했으며 카터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전두환 장군의 군동원 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
- 11. 11 : 서울고법 형사1부, 전두환 ·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12 ·12 및 5·18사건 증언거부와 관련,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영장을 발부
- 12. 23 : 전두환 · 노태우 전직대통령. 12 ·12와 5·18, 비자금사건 선고와 관련 상고를 포기

1997년

- 4. 17 : 대법원, 12 ·12 및 5·18과 관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전씨에 대해 무기징역, 노씨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각각 확정
- 5. 9 : 정부, 5·18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공포
- 5. 16 : 광주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5·18신묘역 준공식
- 5. 18 : 정부주관 첫 5·18기념식을 거행
- 12. 20 :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의 회담에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에 합의하고 순조로운 정권이양과 국정운영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합의
- 12. 22 : 정부, 12 ·12 및 5·18 광주학살과 비자금사건으로 수감주인 전두환 · 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한 19명을 특별사면조치키로 하고 석방

1998년

- 1. 1~1. 31 :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사상자 추가신고 접수–3차보상
  · 신고접수:837명(사망자 19, 행불자 54, 상이자 482, 연행구금자 282)
- 2. 25 : 김대중, 제15대 대통령(1998 2002) 국민의 정부 출발

1999년

- 3. 30 : 5·18자유공원 조성(영창, 법정 이전)

2000년

- 5. 18 : 정부주관 5·18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김대중 대통령 참석
- 6. 15 :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갖고 6·15선언 발표

• 12. 10 :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001년

• 4. 1 : 5·18기념문화관 건립
• 12. 21 : 국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

2002년

• 7. 27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 국립5·18묘지로 승격

2003년

• 2. 25 :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참여정부 출발
• 5. 18 : 5·18민주화운동 23주년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 참석

2004년

• 1. 20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2004.3.27 시행)
• 5. 18 : 5·18민주화운동 24주년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 참석

2006년

• 5. 8 : '5월 어머니집' 개소

2007년

• 5. : 어머니상 제정
• 7. : 영화 '화려한 휴가' 개봉

2008년

- 광주시교육청, 5 ·18민주화운동 교과서 인정교과서 승인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존치 문제 갈등 3년 넘게 지속

2009년

- 5. 18 : 2009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5 ·18기념식 불참

2010년

- 5. 18 : 5 ·18 30주년 기념식

2011년

- 5. 25 : 5 ·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11. : 정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5 ·18등 민주화 운동 내역 삭제
- 12. : 5 ·18민주화운동 고교교과서 집필기준 명시

2012년

- 4. 20 : 2013년 제11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IAC) 광주 개최 도시로 확정

【 參考文獻 】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30호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현장검증 회의록」 제 1~5호
- 평화민주당 5·18광주민중항쟁 백서, 1989.
- 평화민주당 5·18광주민중항쟁 청문회 활동일지, 1989.
- 5·18광주민중항쟁 9주년기념 학술토론회, 「5·18광주민중항쟁과 한국민족민주운동」, 1989.
- 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편, 「부마에서 광주까지」, 1990.
-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 편,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무등산 깃발」, 남풍, 1989.
- 강인섭, 「정승화, "12·12는 분명히 쿠데타였다."」, 신동아, 1987. 12.
- 관훈토론회, 「노태우–12·12는 쿠데타 아니다」. 월간조선, 1987. 12.
- 김상웅 엮음, 「서울의 봄, 민주선언」, 일월서각, 1987.
- 김영진, 「충정작전과 광주항쟁」 상 · 하, 동광출판사, 1989.
-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 마크 피터슨, 「5·18광주사태」, 사계절, 1995.
- 신동아 편집실, 「K공작 언론인 94명 포섭계획」, 신동아, 1990. 2.
- 신동아 편집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전문」, 신동아, 1988. 10.
- 월간조선 특별취재반, 「미공개자료 : 조선일보 취재일지」, 월간조선 1985. 7.
- 위정철, 「내가 겪은 5월의 광주–다시 정리해 본 당시 취재기자의 수첩」, 월간조선, 1988. 5.

■ 윤재걸, 「작전명령-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8.
■ 이태원, 「인터뷰-정호용, 광주사태 책임자 밝히다」, 월간경향, 1988. 5.
■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집」, 광주, 1988.
■ 정상용 외, 「광주민중항쟁, 다큐멘타리 1980」, 돌베개, 1990.
■ 조갑제, 「공수부대의 광주사태」, 월간조선, 1988. 7.
■ 평화민주당, 「1980년의 진실, 광주특위 증언록」, 1988.
■ 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 사진제공

- 나경택 (연합통신 취재부장)
- 황종건 (전 동아일보 사진부장)
- 김녕만 (전 동아일보 사진부장)
- 5·18기념재단, '오월 우리는 보았다.', 2004.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자료실